

북한체제 안정성 평가와 전망

권오국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2
제2장 분석틀	15
제1절 PSI 지표의 설정	15
제2절 연구방법 및 기법	19
제3장 지표별 위기수준 평가	23
제1절 국가분야	23
제2절 경제분야	25
제3절 정치분야	27
제4절 사회분야	32
제5절 국제분야	35
제6절 미래분야	37
제4장 북한 체제 안정성 전망	39
제1절 체제 안정성 평가	39
제2절 체제 안정성 전망	47
제3절 소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52

제5장 결론	57
참 고 문 헌	61
부록	65

표 목 차

<표 I-1> 기존연구 주제 및 내용	4
<표 I-2> 브레진스키의 사회주의 체제 위기수준비교	5
<표 I-3> 민족통일연구원의 북한 위기지수 지표 및 측정항목	6
<표 II-1> PSI의 북한 위기지수 지표 및 측정항목	16
<표 II-2>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설문대상자 비교	19
<표 III-1> 국가분야 세부항목 측정결과	23
<표 III-2> 경제분야 세부항목 측정결과	25
<표 III-3> 정치분야 세부항목 측정결과	28
<표 III-4> 사회분야 세부항목 측정결과	32
<표 III-5> 국제분야 세부항목 측정결과	36
<표 III-6> 미래분야 세부항목 측정결과	37
<표 IV-1> PSI 항목별 위기지수	40
<표 IV-2> PSI 항목별 응답자 분포	42
<표 IV-3>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내용	48
<표 IV-4> 한반도 평화의 3대 목표와 3단계 추진방안	50
<표 IV-5> 사회주의 체제변화 유형별 특징	52
<표 IV-6> 사회주의체제 변화 국가별 사례	53
<표 IV-7> 김정은 체제 안정성 시나리오	54

그림목차

<그림 I-1> 민족통일연구원의 분야·지표별 북한 위기지수(1995)	7
<그림 I-2> 민족통일연구원의 분야·지표별 북한 위기지수(2006)	8
<그림 I-3> 독재체제 유형별 국가의 수(1946-2010)	9
<그림 I-4> 북한과 유사한 독재체제 붕괴유형(1946-2010)	10
<그림 I-5> 부패지수 비교(2012-2017)	11
<그림 I-6> 민주주의 지수 비교(2012-2017)	12
<그림 I-7> 실패국가 지수 비교(2012-2018)	13
<그림 I-8> 실패국가 지수에 따른 북한 실패 요인비교(2012, 2018년)	14
<그림Ⅲ-1> 국가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24
<그림Ⅲ-2> 시장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국가충성도	26
<그림Ⅲ-3> 시장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27
<그림Ⅲ-4>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28
<그림Ⅲ-5> 김정은의 핵개발 정책에 관한 지지도	29
<그림Ⅲ-6> 북한 내 강제구금 및 처형빈도	30
<그림Ⅲ-7> 북한 내 언론·종교·출판의 자유	31
<그림Ⅲ-8> 정치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31
<그림Ⅲ-9> 사회분야 북한 내 꽃제비 숫자	33
<그림Ⅲ-10> 국내 탈북민 입국현황	33
<그림Ⅲ-11> 사회분야 향후 남한 입국 탈북민 숫자	34
<그림Ⅲ-12> 사회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35
<그림Ⅲ-13> 국제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36

<그림Ⅲ-14> 미래분야 김정은 체제의 내부 안정성	37
<그림Ⅲ-15> 미래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38
<그림Ⅳ-1> 국가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43
<그림Ⅳ-2> 경제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43
<그림Ⅳ-3> 정치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44
<그림Ⅳ-4> 사회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45
<그림Ⅳ-5> 국제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46
<그림Ⅳ-6> 미래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46
<그림Ⅳ-7>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구도 비교	47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2011년 12월 17일 김일성에 이어 16년을 집권한 김정일이 69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김정은이 동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에 취임함으로써 북한은 세계사에 드문 3대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¹⁾

독재국가 연구자인 제이슨 브라운리(Jason Brownlee)는 2차세계 대전이후 2006년까지 3년 이상 집권한 258개 국가 중에서 권력세습 시도는 23차례 있었고, 성공한 사례는 9차례(성공률 3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²⁾ 또한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들의 후계 문제를 연구한 레슬리 홈스(Leslie Holmes) 교수는 3Ps+X이론에 근거하여 김정은의 세습 고리는 불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³⁾ 추종세력이 부족하고, 백두혈통 외에 내세울 개인적 자질이 부족하며, 정책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이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그리고 김정일의 사망 당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⁴⁾

- 1)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의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5차 회의에서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북한의 당·군·정 3대 권력기구를 장악하였다.
- 2)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 (July, 2007), pp. 595-828.
- 3) 이 이론은 권력기반(Power base), 개인자질(Personal qualification), 정책입안능력(Policy making ability)과 '특별한 상황(X)'를 핵심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독재국 권력세습 성공률 39%... 3년차 김정은 시험대," 2013.12.17.
- 4) 1990년대 들어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예견한 대표적 연구사례로 1998년 1월 미 CIA 정보보고서(Intelligence Report), 2002년 9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 2004년 5월 미 국방부 보고서와 동년 6월 공개된 미 RAND 보고서 등이 있다. Charies. Wolf Jr. Kamil Akramov. North Korea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Rand, 2005) 참조, 이외 2006년에 발표된 로버트 카플란의 7단계론 등이 있다. Rober D. Kaplan, "When North Korea Falls," *Atlantic Monthly*(October 2006).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로부터 체제 안정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은 크게 보아 연착륙론(Soft landing)과 경착륙론(Hard landing)으로 대별되고 있다. 경착륙론은 장성택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주목했으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경험하면서부터 점차 안정적인 연착륙론으로 논의 방향이 기울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측과 달리 북한체제의 생명력은 어디서 비롯되고 있으며, 실패국가(Failed State)로 여겨 온 북한체제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⁵⁾ 북한에서는 왜 쿠데타나 반란과 같은 정치적 갈등상황이 초래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과연 북한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위기관리 방식을 분석하고, 나아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실태와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대북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관한 기존연구는 거의 대부분 북한 붕괴론에 의지하고 있거나 또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체제 내구력에 집중해 왔다.

해외 연구의 선두주자는 브레진스키(Zbgniew Brezezinski)가 『대실패(Grand Failure)』를 통해 1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1987년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수준을 비교평가 한데서 부터 비롯되었다.⁶⁾ 이에 자극을 받아 통일연구원이

5) Robert I. Rotberg, Failed States, Collapsed States, Weak States: Causes and Indicators(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pp.1~24.

6)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New York: Charles Scribener's Sons, 1989).

1996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브레진스키의 위기지수를 변용하여 KINU지수를 독자적으로 개발,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한바 있다.

〈표 1-1〉 기존연구 주제 및 내용

연구 주제	주요 내용	비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 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민족통일연구원 1996)	1992년 체제위기 임계점 도달	브레즈네프 위기 지수와 KINU 지수로 평가
『CIA 정보보고서(Intelligence Reoport)』(CIA, 1998)	2003년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	붕괴 쿠데타, 내전 가능성 남한에 의한 평화적 통일 기정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청사진 (A Blue P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CSIS, 2002)	남한 주도의 평화적 통합	가설적 통일 가능성 제시
『북한의 역설(North Korean Paradoxes)』(RAND, 2005)	합의 흡수, 무력 3가지 통일방식 제시	미중 협력시 한반도 통일 단축 가능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통일연구원 2006)	붕괴 가능성은 낮고,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 변화 예측	1996년 KINU 지수에 따른 평가 및 임계점 상황 조정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통일연구원 2007)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 변화 불가 피	체제복원력, 체제적응력, 급변사태 등 3가지 변수로 분석
『김정일·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외교안보연구원 2011)	립셋(Lipset)의 정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체제 안정성을 분석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반도 정세보고서(KPSI)』(삼성경제연구원 2012)	한반도안보지수(Korean Peninsula Security Index: KPSI), 2005~2012년까지 분기별 발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상황 설문조사
『김정은 정권의 체제 내구력 평가와 한국의 대북정책 모색』(국회입법조사처 2012)	독재자와 엘리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배연합 내구성 평가	김정은 체제의 급격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북한체제의 위기구조와 사회변동』(통일연구원 2013)	체계적 저항은 없으나, 우발적 상황 발생 가능성 존재	동유럽 체제 전환 사례 참조, 북한사회 변동 전망
『북한 결국 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의 현상유지 편향』(이산정책연구원 2013)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기초, 내재적 변화 가능성 분석	북한은 체제 개혁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
하대성 외 “북한체제의 변화와 동요의 흐름: 2원적 분화와 제2사회의 시각에서” 『대한정치학회보』(대한정치학회 2016)	헨키스(Hankiss)의 ‘제2의 사회’ 개념을 적용, 북한 체제의 내구성 평가	북한은 시민형 인간에서 시민형 인간으로 변화 중이며, 제2사회로 발전 가능
정성윤 외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 비교권위주의적 시각” 『통일정책연구』(통일연구원 2017)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방법론 적용	북한체제가 붕괴한다면 민중봉기나 쿠데타 같은 정치적 반란에 의해 붕괴
『통일의식조사』(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7)	2007년부터 탈북민 1,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 매년 설문결과 발표	통일방식, 통일예상시기, 북한의 경제상태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DI)』(The Economist, 2017)	5개 지표를 통해 민주주의 지수를 매년 발표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 국가 중 최하위
『부패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7)	전세계 10개 기관이 13개 지표를 통해 부패인식 지수를 매년 발표	북한의 부패지수는 180개 국가 중 171위를 기록
『실패국가 지수(Failed States Index: FSI)』(Foreign Policy, 2017)	12개 지표를 통해 실패국가 지수를 매년 발표	북한은 위험단계 국가군으로 187개 국가 중 28위

브레진스키는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을 분석하면서 10가지 지표를 사용했으나, 이 중 4가지를 이념지표로 설정하여 한 분야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주었다. 서구식 시민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을 분석하기에는 적당할지 모르나, 아시아 국가들을 분석하는 지표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관계에 대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표 I -2> 브레진스키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비교(1987년)⁷⁾

지표	소련	중국	동독	폴란드	헝가리	유고	베트남	북한
사회주의 대중적 호소력 상실	1	1	1	3	3	2	2	1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	2	0	1	3	3	2	2	2
생활수준의 저하	2	0	1	3	2	3	3	2
공산당의 사기저하	2	0	0	3	2	2	1	0
종교활동의 증대	1	0	0	3	1	1	0	0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충돌	1	0	1	3	3	3	1	1
경제적 사유화의 증대	1	2	1	2	3	2	1	0
정치적 반대의 활성화	1	1	1	3	2	2	0	0
공개적인 정치적 다원화 요구	2	2	0	3	3	3	0	0
인권문제에 대한 수세적 대처	2	1	1	1	1	2	2	2
합계	15	8	7	27	23	22	12	8

* 위기지수: 3(아주 좋다), 2(좋다), 1(부분적으로 좋다), 0(옳지 않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동독, 유고, 소련 등은 정확하게 체제붕괴를 예견했으나, 쿠바, 베트남, 북한, 중국 등은 브레진스키가 예상한 위기와 달리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의 경우, 브레진스키는 위기지수 순위를 중국과 같이 8위 국가로 평가하고, <표 I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근거로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 생활수

7)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New York: Charles Scribener's Sons, 1989), p.234.

준의 저하, 인권문제에 대한 수세적 대처, 사회주의의 대중적 호소력 상실 등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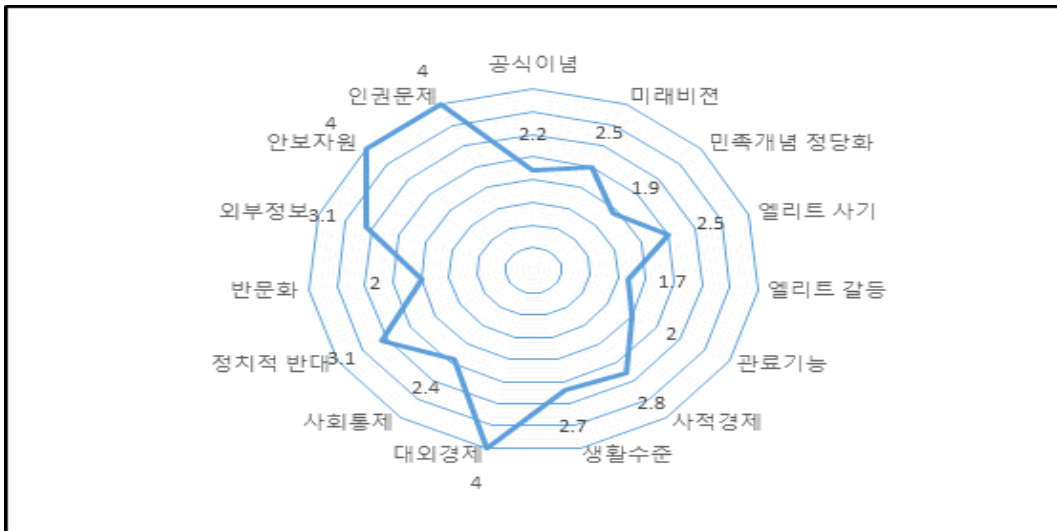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에서는 브레진스키의 10가지 지표를 보완하여, 이념·엘리트·경제·통제·대외관계 등 5개 분야에 걸친 15개 RINU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다시 37개의 측정항목으로 세분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표 1-3〉 민족통일연구원의 북한 위기지수 지표 및 측정항목

분야	지표	측정항목
이 념	공식이념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 집단주의 명제 ■ 부자간 권력승계 명제 ■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명제
	미래에 대한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대한 희망, 실질적 대가
	공식 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성 원칙에 대한 금지감 ■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엘 리 트	엘리트의 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금지감 ■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엘리트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 갈등 유무 ■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관료기구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지침의 침투력 ■ 하위조직의 자위성
경 제	사적 경제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경제영역의 비중
	생활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 생필품 및 주거지 ■ GNP 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외채
통 제	사회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 탈북자 증감추이
	정치적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표출 ■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 체제비판 행위
	반문화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 종교활동 ■ 전통적 집단 의식
	외부정보의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변화의 인지도 ■ 중국변화의 인지도
대외 관계	안보자원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생산량과 외부유입량 ■ 원유도입량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아울러, 북한의 위기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30명의 탈북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⁸⁾

〈그림 I -1〉 민족통일연구원 분야·지표별 북한위기지수(1995년)



RINU 지표에 준거한 북한체제 위기지수는 1986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는 체제위기의 한계점을 이미 통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림 I -1>에서 보듯 대외경제, 인권문제, 안보자원 등에서는 극한의 위기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엘리트 갈등, 민족개념 정당화, 공식 이념 등에서는 비교적 안정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근거하여, 민족통일연구원의 최종결론은 북한 당국이 위기수준 증가추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2001~2008년 사이에 체제변혁 임계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⁹⁾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햇볕정책과 2000년 6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일이 2002년에 실시한 내부 개혁이라 할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영향에 따라 체제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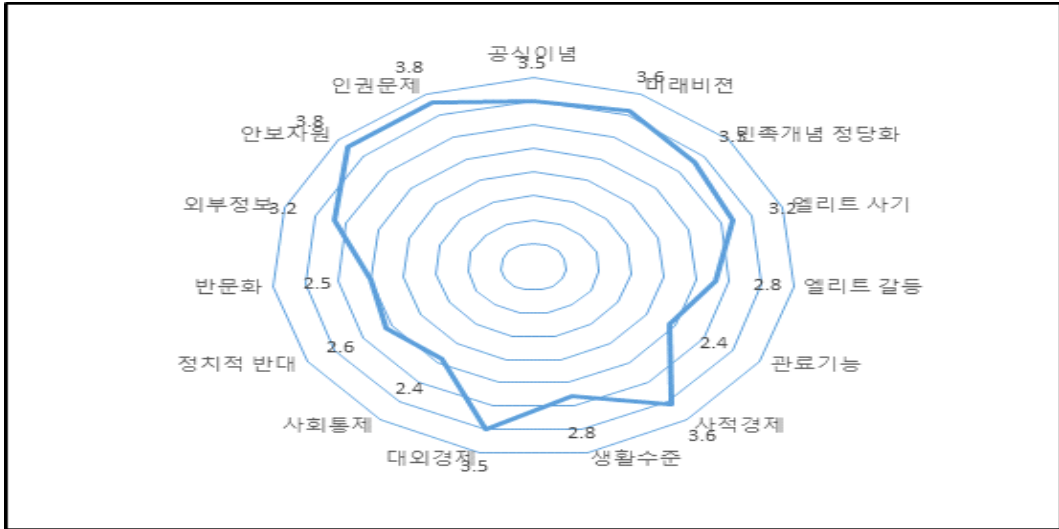
민족통일연구원은 국제관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거나 비공식 부분을 공식

8)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민족통일연구원, 1996), p.1.

9) 김성철 외, 앞의 책, p.7.

부문으로 수용하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전반적 위기수준은 정체 내지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¹⁰⁾ 즉 대외압박이 완화되고, 경제개혁이 이뤄질 경우, 체제 내적 위기수준은 억제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그림 I -2> 통일연구원 분야·지표별 북한위기지수(2006년)



2006년에 이뤄진 북한체제 내구력 평가 보고서는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36개 측정항목으로 세분화하여 1996~2005년 동안 김정일 정권의 위기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했다.¹¹⁾ 1996년에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탈북민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2명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1995년 북한위기지수 <그림 I -1>과 2006년 위기지수 <그림 I -2>를 비교해 볼 때, 전 분야에 걸쳐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북한의 공식이념인 주체사상이 내면화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도 약화되고, 공식이념에 대한 긍지도 줄어들었다. 또한 간부들은 자긍심은 없으나 부패한

10) 민족통일연구원은 국제관계의 변화와 비공식 부분을 공식부문으로 수용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전반적 위기수준은 정체 내지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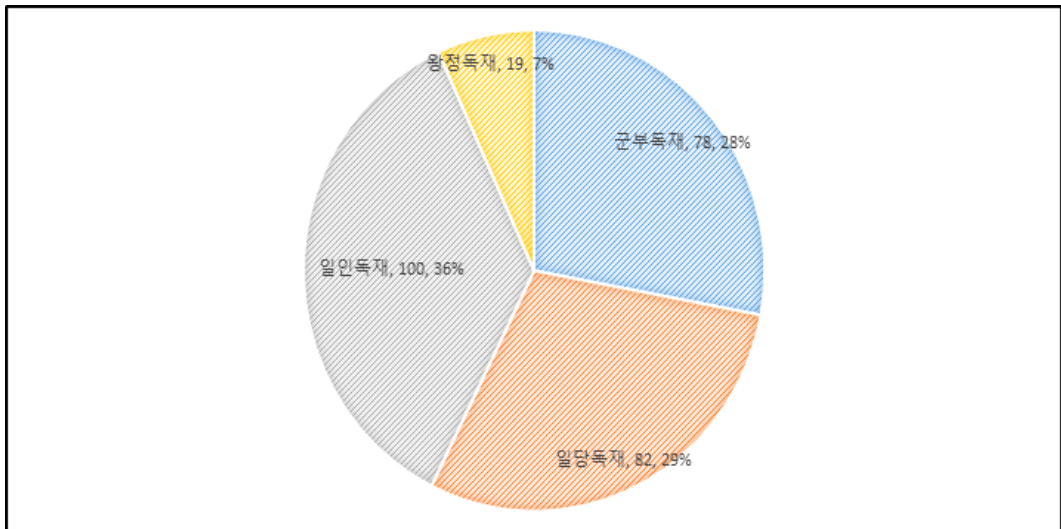
11) 통일연구원은 위기지수를 권력엘리트(power elite), 정권(rgeime), 체제 혹은 국가(system or state)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정권 차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통일연구원, 2006), p.7.

상태이고, 엘리트간 갈등은 없으나 기관·개인 간 갈등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1996년 분석당시 북한정권의 임계점을 2.5로 설정했으나, 2006년에는 3.0으로 상향 설정하고, ‘불만의 힘’과 ‘통제의 힘’의 관계에서 통제가 불만을 능가하고 있는 한 정권붕괴는 쉽게 도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¹²⁾

한편, 비교권위주의 체제를 분석한 게디스(Barbara Geddes)는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존재한 총 279개 권위주의 체제를 4가지로 분류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경우는 겨우 25%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다.¹³⁾

게디스는 전 세계 권위주의 체제를 군부독재(Military dictatorship), 일당독재(dominant-party dictatorship), 일인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 왕정독재(monarchy)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다.¹⁴⁾

〈그림 1-3〉 독재체제 유형별 국가의 수(1946-2010)



12) 전현준 외, 앞의 책, p.18.

13)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2, No. 2 (2014), pp. 313-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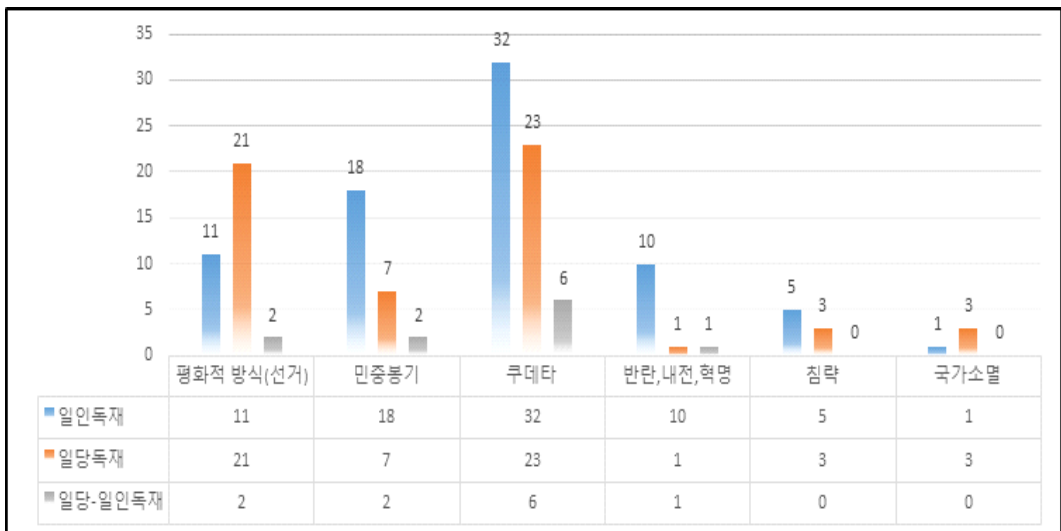
14) 게디스, 라이트, 프란츠 등이 구분한 권위주의 체제의 핵심적 기준은 국가원수의 선택권한, 주요정책 결정권, 군·경을 포함한 안보기구에 대한 통제력이 군부, 지배정당, 독재자, 왕족 등에 있는지의 여부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왕정 독재는 평균 55년 이상 존속하며, 일당독재는 28년 이상 권력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일인독재는 일당독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년에 불과하였다. 군부독재는 평균 7년도 채 지속되지 못하고, 전복되어 민주화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로 전환되었다. 즉 권위주의 체제 4가지 유형 중 군부독재가 가장 취약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⁵⁾

권위주의 독재체제는 일인독재(100개국, 30%), 일당독재(82개국, 22%), 군부독재(78개국, 15%), 왕정독재(19개국, 33%) 등으로 분류했다. 이 중에서 쿠데타, 혁명, 내전과 같은 내부 정치적 갈등이나 외국의 침략 등 강압적 방식을 통해 붕괴된 체제는 왕정독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과 유사한 체제의 속성을 가진 권위주의 독재체제는 일당독재와 일인독재가 혼합된 국가인 유고, 리비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이 대표적이고, 주로 쿠데타에 의해 체제가 붕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4〉 북한과 유사한 독재체제 붕괴유형(194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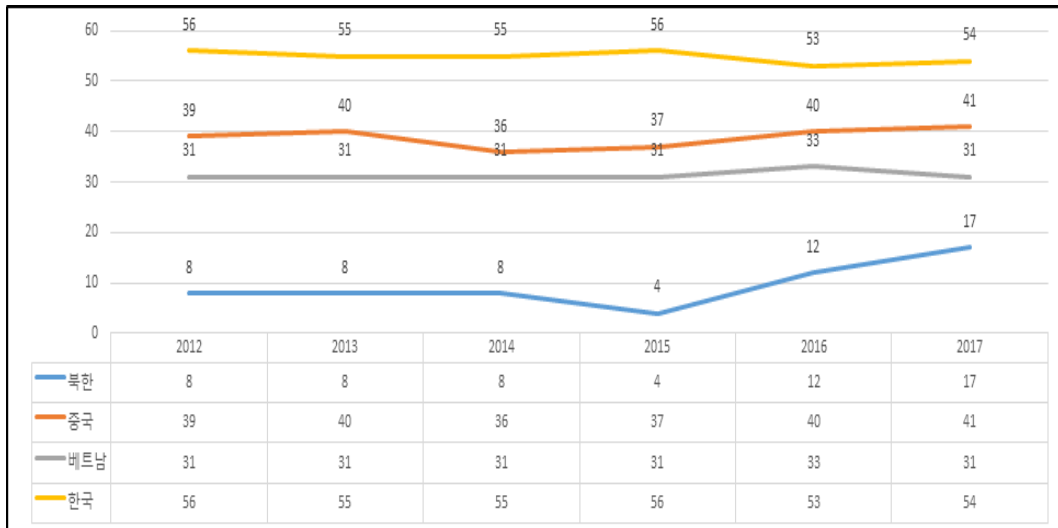
15) 정성운 외,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 비교권위주의적 시각”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통일연구원, 2017), pp.90-91.

한 나라의 체제 안정성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이용하는 방식이 존재한다.¹⁶⁾ CPI 지수는 199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등 10여개 기관이 4개 분야(정치적 안정, 폭력의 부재, 정보의 효과성, 법제도의 효율성) 13개 지표를 기반으로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북한은 180개 국가 중에서 171위로, 수단,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와 같이 가장 부패한 국가군에 속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 청렴도는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국가부패는 심각한 것으로 평가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부패지수는 8에서 17점으로 상승하여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림 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중국과 비교할 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5> 부패지수 비교(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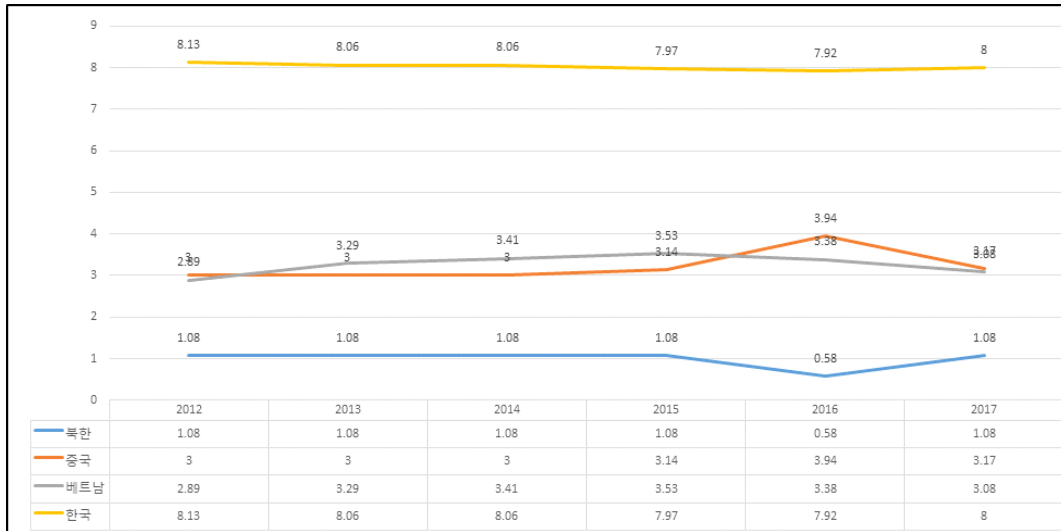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DI) 모델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가 전 세계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다. 다

16) <http://www.transparency.org>(접속일자: 2018년 7월 20일).

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2017년 북한은 다원성, 시민자유도 분야에서 0점, 정부기능 2.5점, 정치참여 1.67점, 정치문화 1.25점을 획득하여 권위주의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1-6〉 민주주의지수 비교(2012-2017)



민주주의 지수는 ‘완전한 민주주의’(10~8점), ‘결함 있는 민주주의’(8~6점), ‘혼합체제’(6~4점), ‘권위주의 체제’(4점 이하)로 분류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2017년 기준 평균 1.08점으로 전 세계 167개 국가 중 최하위(167위)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되고 있다.¹⁷⁾

체제 안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 실패국가 지수(Failed States Index)도 참조할 수 있다. FSI 지수는 평화기금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200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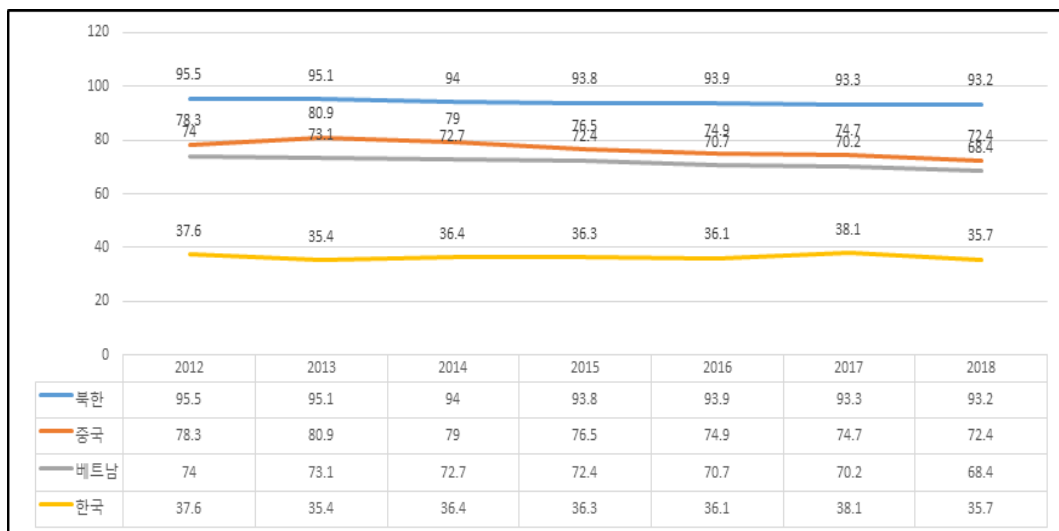
4개 분야 12개 지표의 합산을 통해 실패국가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국가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 국가를 위험군(90~120점), 경고군(90~60점), 안정군(60~30점), 지속가능군(30점 이하)으로 구

17)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18/DemocracyIndex>(접속일자: 2018년 7월 22일).

분한다.

위험군 국가를 세분하면, ‘매우높은 위험’(110~120점), ‘높은 위험’(110~100점), ‘위험’(100~90점)으로 구분 가능하며, 북한은 ‘위험’ 국가에 속한다.

〈그림 1-7〉 실패국가지수 비교(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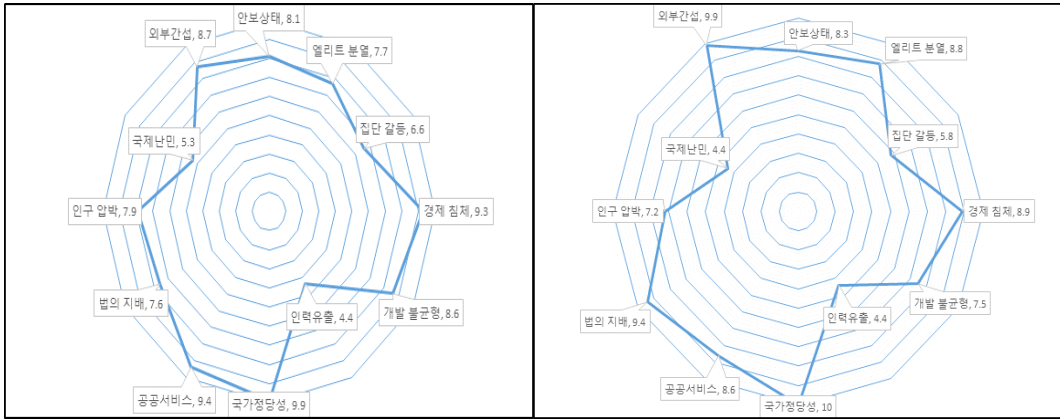


2018년 기준 북한은 93.2점으로 김정은 집권초기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전 세계 178개 국가 중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28위에 위치해 있다.

북한은 2005년 이래 계속 위험단계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97.8점(실패국가 19위)에서 93.2점(실패국가 28위)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¹⁸⁾

18) 이 수치는 4가지로 분류되는 12가지 지표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각의 지표는 0~10 (사실상 1~10)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안정적, 10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는 뜻이다. 12가지 지표로는 Security Apparatus(안보상태), Factionalized Elites(엘리트 분열), Group Grievance(집단 갈등), Economic Decline(경제 침체), Uneven Economic Development(개발 불균형) Human Flight and Brain Drain(인력유출), State Legitimacy(국가정당성) Public Services(공공서비스), Human Rights and Rule of Law(인권, 법의 지배) Demographic Pressures(인구압박), Refugees and IDPs(국제난민), External Intervention(외부간섭) 등이다.

〈그림 1 -8〉 실패국가 지수에 따른 북한 실패 요인비교 분석(2012, 2018년)



FSI 지수에 따른 분야별 북한 실패요인 분석에 의하면,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국제난민은 줄어들고 있으나, 외부간섭, 엘리트분열, 법의지배 등은 체제 안정성을 훼손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2장 분석틀

제1절 PSI 지표의 설정

본 연구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술한 기존 모델의 장단점 분석을 기반으로 북한 체제 안정성 지수인 ‘PSI 모델’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 체제 위기지수를 측정하려면 우선 지표(indicator)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체제 안정성을 전망하기 위해 ① 브레진스키 모델, ②통일연구원 모델, ③민주주의 지수모델, ④실패국가지수 모델 등을 기초로 ‘국가’,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미래’ 등 6개 분야 등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14가지 기본적인 지표를 추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측정항목을 세분화한 28개 항목을 개발했다.

특히 지표개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브레진스키와 통일연구원 등에서 간과한 국제변수와 미래변수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국가이든 현대사회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국가란 존재할 수가 없다. 주체와 자립을 강조하는 북한 역시 그 규모야 어떠하던지 간에 타 국가와의 정치, 외교, 경제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국가 간의 의존 정도에 따라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은 국가운영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란 용어는 북한체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북한체제의 위기수준을 반영하는 하나의 측정 도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북한체제 변화와 관련해서는 게디스 모델을 통해 향후 북한체제를 전망해 볼 것이다.

〈표 II-1〉 PSI의 북한 위기지수 지표 및 측정항목

분야	지표	측정항목
국가	① 치안·안보기구(Security Appar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안기구간 갈등 • 향후 공안기구간 갈등
	② 엘리트 파벌(Factionalized Eli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트간 권력투쟁 • 엘리트의 역할 및 자긍심
	③ 집단적 불만(Group Griev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보, 낙서, 삐라 확산 • 주민집단 소요
경제	④ 시장 충성도(Market Loyal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vs. 국가충성도
	⑤ 경제 침체(Economic Dec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호전 또는 침체
	⑥ 개발 불균형(Uneven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문제 개선 • 직업별 빈부격차 • 교육비 비중
	⑦ 인력 유출(Human Fl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개방 정책의지 • 노동자 해외 진출 의지 • 지식인 선진지식 습득의지
정치	⑧ 국가 정통성(Legitimacy of the 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 핵개발 지지도
	⑨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정보 유입 • 인신 강제구금
	⑩ 인권(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종교, 출판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사회	⑪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⑫ 인구 압력(Demographic Press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보급 • 꽃제비 증감
	⑬ 난민(Refugees & ID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민 증감
국제	⑭ 외부 간섭(External Inter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제재 • 중국의존도
미래	⑮ 체제 안정성(System S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체제 안정성 • 정상회담 이후 체제 안정성

북한체제(North Korean System)란 표현은 국가, 정권, 제도 등 3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¹⁹⁾ 체제유형을 분류한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는 8가지 체제 결정요인을 기준으로 ①서구적 다원주의 체제(polyarchy), ②공산주의 붕괴 후 체제(Post communist regimes), ③동아시아의 정부형태(East Asian regimes), ④이슬람 정부체제(Islamic regimes), ⑤군사정부 체제(Military regimes) 등 5개 정치체제로 구분한바 있다.²⁰⁾

반면, 헤이그와 해롭(Hague and Harrop)은 통치체제를 ①민주주의 체제(Democratic regime), ②유사민주주의(Pseudo Democratic/Semi democratic regime), ③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²¹⁾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가 규정한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을 그대로 원용하고자 한다.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체제의 특성을 ①정교한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존재, ②일인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통치, ③비밀경찰에 의한 심리적·물리적 테러체제, ④라디오·신문·영화 등 대중매체에 대한 총체적 독점, ⑤무장력의 효율적 독점, ⑥중앙집권적 통제·지시 경제체제 등 6가지로 기술했다.²²⁾

전체주의는 독재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독재체제를 전체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체제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구소련을 위시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궤를 같이하며,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온 연구주제이다. 과연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전 세계 유일의 국가인가?

본 연구는 북한 체제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온 근원을 체제 안정성에서 찾고

19) 정권이란 국가권력을 장악한 지도자와 그 집단을 지칭하며, 제도란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로 특징지어진 경제 제도를 의미하고, 국가란 정권과 제도에 따라 국가의 여러기관과 국민, 영토가 합쳐진 개념이다.

20) Andrew Heywood, Political Theory: An Introduction(New York: MacMillan, 1999), p.29.

21) Rod Hague and Martin Harro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8th ed.(New York: Palgrave MacMilan, 2010), p.9.

22)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rocracy(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5) 참조.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체제 안정성이란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을 반영한 정치안정, 경제안정, 사회안정, 그리고 국가와 주변국 관계를 포함한 구조안정성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각 분야별 안정적 요인과 불안정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고, 불안정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한 기존 연구는 모두 일정부분 한계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체제가 갖는 정보의 한계와 자연과학과 달리 실험이 불가능한 사회과학의 태생적 한계, 그리고 북한 정치·문화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체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정치란 어차피 가능성의 영역에 해당되며, 변화를 전망할 때 비로소 일관성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분석의 주된 관점은 체제변화를 불러 올 정권차원의 변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SI 지수는 2018년 한 해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시계열적 분석이 이뤄질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표 및 세부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므로 기존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할 경우 유의미한 해석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기법

본 연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방법은 설문조사이며, 설명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설문문항 개발과정에서 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CPI 지수’, ‘DI 지수’, ‘FSI 지수’ 등을 활용, 분석·설명력을 높일 계획이며, 양적 연구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북한 전문가(A그룹)’ 26명과 ‘탈북민(B그룹)’ 26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동일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북한 전문가(A그룹)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북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탈북민(B그룹)은 국내 전문가와 달리 표본추출이 쉽지 않아 가급적 북한내부 정보를 전화나 인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따라서 대표성에는 양 그룹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사전에 밝혀둔다.

〈표 II-2〉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설문대상자 비교

국내 전문가 (그룹A 26名)	연구경력	
	10년 미만	11名 (42%)
10~15년 미만	7名 (27%)	
15~20년 미만	6名 (23%)	
20년 이상	2名 (8%)	
탈북민 (그룹B 26名)	탈북시기	
	1년 미만	2名 (8%)
	1~2년 사이	1名 (4%)
	2~5년 사이	3名 (11%)
	5년 이상	20名 (77%)
	북한 내부 정보 입수 주기	
	1개월 이내	1名 (4%)
	2~3개월 이내	7名 (27%)
	3~6개월 이내	6名 (23%)
	6개월 이상	12名 (46%)

국내 전문가들의 경우 58%가 최소 10년 이상 북한을 연구해 온 전문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탈북민의 경우 2년 이내 북한지역을 이탈한 경우가 12%이고, 북한 내부정보를 통신 또는 인편을 통해 6개월 이내 주기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54%이다.

기존연구는 북한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또는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양 그룹간 공통성과 차이성을 무시해 왔다. 만약 동일한 질문에 그룹 A와 그룹 B간의 인식차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북한적 현상을 바라보는 집단 간의 오류이거나 또는 서로 다른 체제에서 교육받은 학습효과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형성된 세계관의 차이이거나 북한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그룹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부터 2018년 9월까지를 분석시기로 삼았다. 지표에 따른 항목별 점수는 등간척도(0~10점)를 부여하여, FSI지수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종 지수가 10점 등간척도를 사용하고 있기에 신규 개발한 PSI 지수와의 상호 비교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각 질문항목마다 2012년을 기준 년도 삼았으며, 등간척도 5점을 기준으로 현재와 대비하여 감소추세는 ‘매우 낮음’ 쪽으로, 증가추세의 경우 ‘매우 높음’ 쪽으로 체크를 유도하였다.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과 관련하여 통일연구원의 RINU 지수(등간척도 1~4점)는 체제위기의 임계점을 2.5로 설정하고 있으나,²³⁾ 본 연구에서는 임계점보다는 2012년과 비교된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추세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어느 한쪽 분야로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해당 분야의 안정성에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한 PSI 지수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성을 노정하

23) RINU 지수의 토대가 된 브레진스키의 위기지수는 지표별 척도 0~3점을 항목별로 부여하고, 그 합계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지수를 국가별로 서열화 하였다.

고 있다. 즉, 분석시기로 2012년부터 2018년 9월까지를 대상 시기로 설정하였으나, 해당년도 마다 축적된 데이터가 없기에 동 기간까지의 추세 분석에 그쳤다는 점이다. 또한, 통일연구원에서 비공개로 매년 조사·분석하고 있는 북한 정세지수와 비교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는 PSI 지수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그 의의성은 찾을 수 있다. 즉, 기존연구는 거의 대부분 국내전문가와 탈북민을 구분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국내전문가(그룹 A)와 탈북민(그룹 B)간의 정보획득과 경험에 따른 인식차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그에 따라 북한 체제 안정성 지수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가정아래 양 그룹간의 지표 편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표에 따른 세부항목도 가급적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항목을 원용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연구자의 자의적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교정해 나가하고자 한다.

제3장 지표별 위기수준 평가

제1절 국가분야

PSI에서 규정한 국가분야의 지표로는 첫째 치안·안보기구를 분석하되 측정항목으로 김정은 집권이후 국가 공안기구간 갈등 빈도와 향후 공안기구간의 갈등을 예상하는 질문을 제시하였고, 둘째 엘리트 파벌을 분석하는 항목으로 엘리트간 권력투쟁 및 엘리트의 자긍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불만을 분석하기 위해 벽보, 낙서, 삐라 등의 출현과 주민집단 소요 등을 측정항목으로 삼았다.

〈표 III-1〉 국가분야 세부항목 측정 결과

항목	국내전문가	탈북민
Q1) 권력투쟁 빈도	3.19	6.81
Q2) 공안기구간 갈등과 충돌	4.08	7.31
Q3) 향후 공안기구의 반정부 투쟁	2.2	3.69
Q4) 당·군·정 간부의 자긍심	7.11	6.5
Q5) 벽보·낙서·삐라의 출현	3.46	5.77
Q6) 주민들의 집단소요	2.03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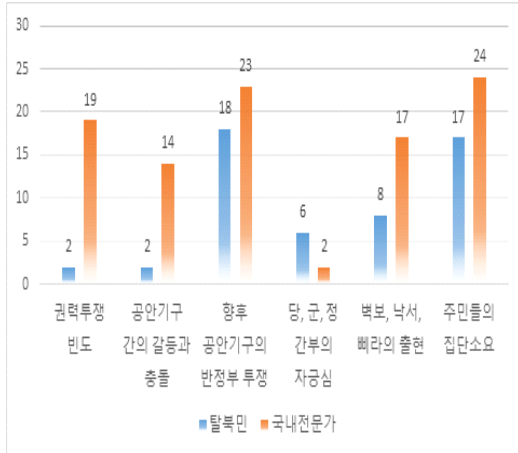
* 각 질문마다 응답자가 체크한 등간척도의 평균을 의미함

국내전문가와 탈북민에게 6가지 질문을 던진 결과 “김정은 정권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 빈도,” “북한 내 공안기구(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간의 갈등과 충돌,” “최고지도자를 비방하는 유언비어나 벽보·낙서·삐라의 출현” 등에서 확연한 인식차가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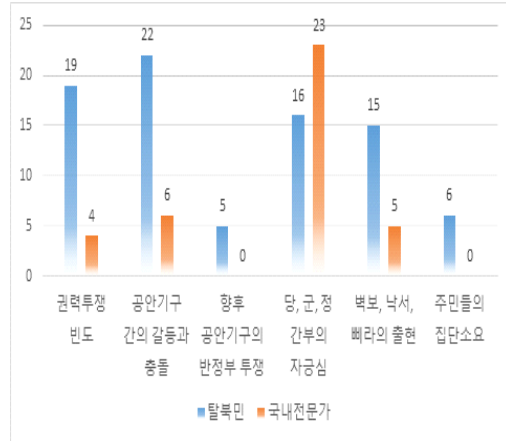
<그림 III-1> 국가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단위: 명)

<매우감소: 5점이하>



<매우증가: 5점이상>



<그림III-1>은 응답자 52명 중에서 2012년 김정은의 등장과 현재(2018년 9월)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한 숫자이다. 즉, 등간 척도 5점을 체크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매우 낮음 또는 높은 방향으로 체크한 수치를 재분류한 것이다.

탈북민은 그동안 북한내 권력투쟁이 심각하게 전개돼 왔다(90%)고 보고 있으나, 국내전문가는 그렇지 않다(82.6%)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안기구간 갈등과 충돌에 대하여 탈북민 91.6%가 매우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내전문가는 30%만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향후 공안기구 간의 반정부 투쟁은 탈북민의 21.7%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당·군·정 간부들의 자금심과 관련하여 탈북민의 72.7%, 북한전문가 92%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의 65.2%가 벽보·낙서·삐라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국내전문가는 22.7%만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항의 및 소요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26%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국내 전문가는 이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III-1>과 <그림III-1>의 상관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2절 경제분야

경제분야는 시장과 실물경제, 빈부격차 등을 포함하여, 8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시장의 활성화가 주민들의 국가충성도를 약화시키는가”의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국내전문가와 탈북민의 인식격차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표 III-2〉 경제분야 세부항목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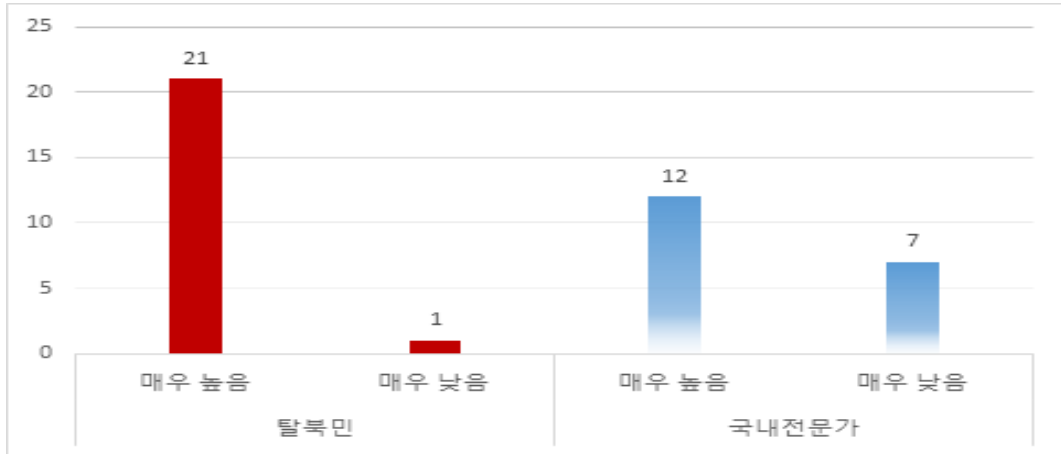
항목	국내전문가	탈북민
Q7) 시장 vs. 국가충성도	5.42	7.08
Q8) 경제 호전 또는 침체	5.11	5.62
Q9) 식량 문제 개선	5.81	5.12
Q10) 직업별 빈부격차	7.73	8.0
Q11) 교육비 비중	5.92	6.62
Q12) 개혁개방 의지	7.0	6.31
Q13) 노동자 해외진출	6.96	8.88
Q14) 지식인 선진지식 습득의지	6.23	6.54

* 각 질문마다 응답자가 체크한 등간척도의 평균을 의미함

탈북민의 91.3%가 시장(장마당)이 활성화 될 경우, 주민들의 국가충성도는 약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국내전문가는 63.1%가 이에 동의하였고, 36.8%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시장과 국가는 언제나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90년대 중반 사회주의 배급체제의 붕괴를 직접 체험한 탈북민이 국내전문가 보다 북한내 시장상황에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2〉 시장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국가충성도

(단위: 명)



탈북민의 66.7%가 김정은 등장 이후 실물경제 연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국내전문가 57.1%도 북한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식량문제 또한 탈북민의 60.9%가 2012년 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전문가 71.4%가 이에 동의하였다.

직업에 따른 빈부격차는 탈북민 92.3%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전문가도 북한내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북한주민의 가계수입 중에서 교육비 비중을 묻는 질문에 탈북민의 90.1%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국내전문가 역시 84.2%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답했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 의지에 대해서 탈북민은 80.9%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전문가들 또한 84%가 경제개혁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탈북민 전원은 북한주민들이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국내전문가들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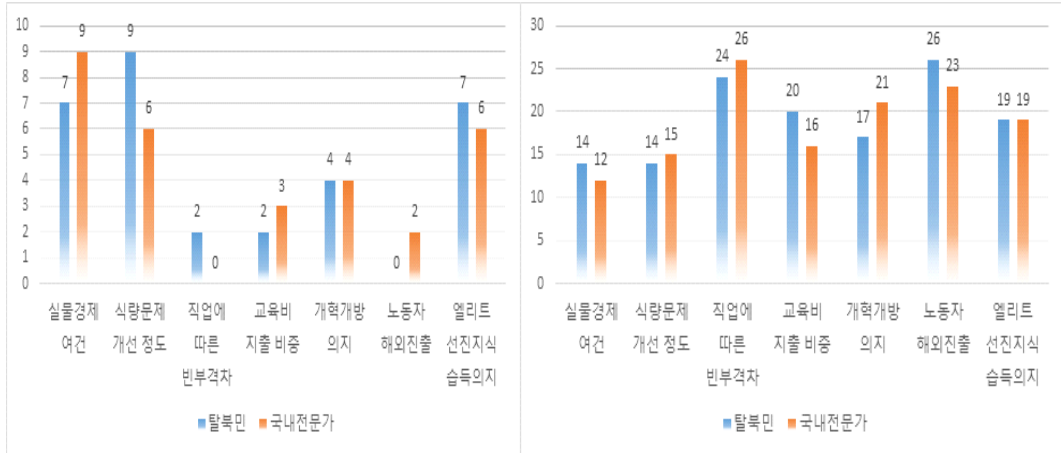
북한 내 엘리트들의 해외진출 또는 선진지식 습득의지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 탈북민 73%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국내전문가 76%도 북한 지식인의 선진지식 습득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III-3> 시장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단위: 명)

<매우감소: 5점이하>

<매우증가: 5점이상>



시장의 활성화가 국가충성도를 약화시킨다는 질문항목 이외, 경제분야에서는 탈북민과 국내전문가들 간에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절 정치분야

정치분야는 국가충성도, 공공서비스, 인권 등 3가지 지표에 따라 6가지 세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의 핵개발 정책에 대한 지지도,” “북한당국에 의한 강제구금 또는 처형 빈도,” “언론·종교·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탈북민과 국내전문가들 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3〉 정치분야 세부항목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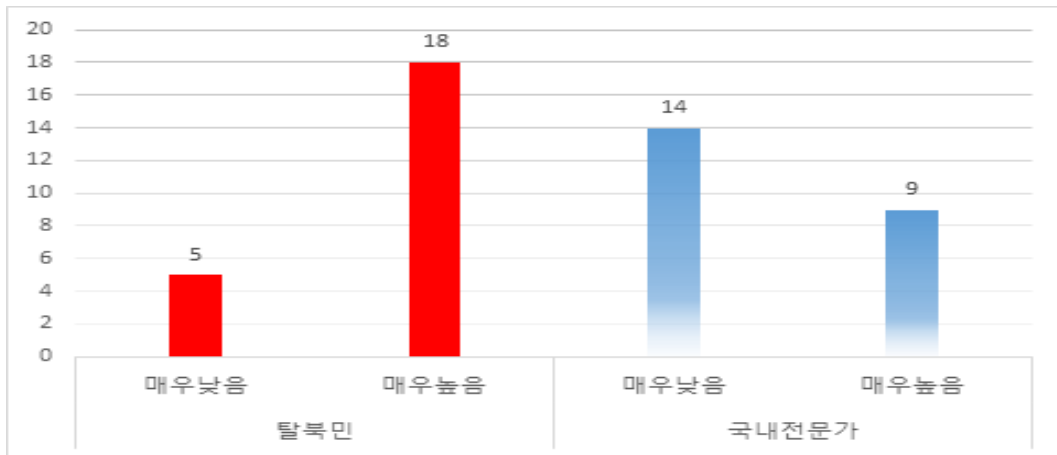
항목	국내전문가	탈북민
Q15)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4.35	6.39
Q16) 핵개발 지지도	6.19	5.77
Q17) 외부정보 유입	6.5	6.12
Q18) 인신 강제구금	4.46	6.92
Q19) 언론, 종교, 출판의 자유	3.04	1.77
Q20) 거주이전의 자유	4.15	3.92

* 각 질문마다 응답자가 체크한 등간척도의 평균을 의미함

탈북민 78.2%가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전문가들은 39.1%만이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격차는 탈북민이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북한당국에 의한 세뇌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지거나 아니면 북한 주민의 주체사상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I-4〉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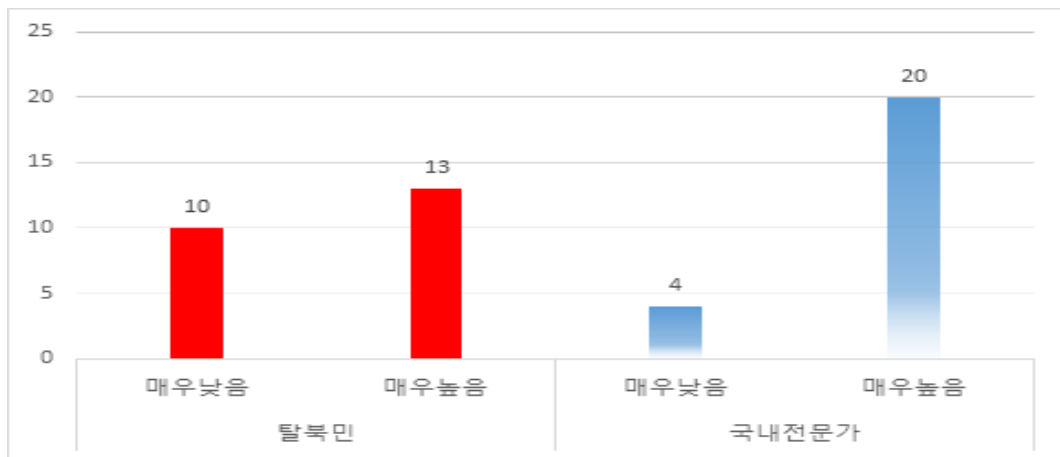


김정은의 핵개발 정책에 관한 지지도 역시 탈북민과 국내전문가 간의 인식 차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북한주민들의 핵개발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탈북민 56.5%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83.3%가 북한주민들이 지지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III-5〉 김정은의 핵개발 정책에 관한 지지도

(단위: 명)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내 강제구금 및 처형빈도를 묻는 질문에 86.9%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는 반면, 국내전문가들은 66.6%만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 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총살·숙청한 인원이 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중 총살·처형된 간부들은 약 140명이라고 밝혔다.²⁴⁾ 한편, 탈북근로자 노희창씨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3년 말까지 약 3,000명의 사람들을 처형했고 15,000명을 수용소에 가뒀다고 주장하였다.²⁵⁾ 미 국무부도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7년 한해 북한에서 처형된 사람만 119명, 수감된 사람도 770명에 이른다고 적시하고 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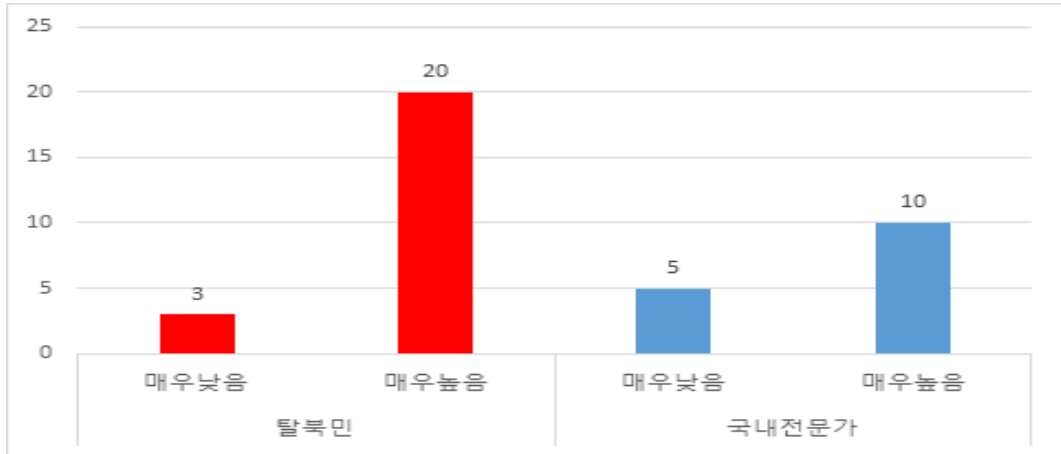
24) NewDaily, “‘폭군’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340명 총살·숙청”, 2016.12.31.

25) 자유일보, “김정은 집권초기 3000명 처형, 15,000명 수용소 수감”, 2018.10.29.

26) 채널A, “北 종교 활동자 119명 처형…바티칸 ‘신중히 검토’”, 2018.10.22.

〈그림 III-6〉 북한 내 강제구금 및 처형빈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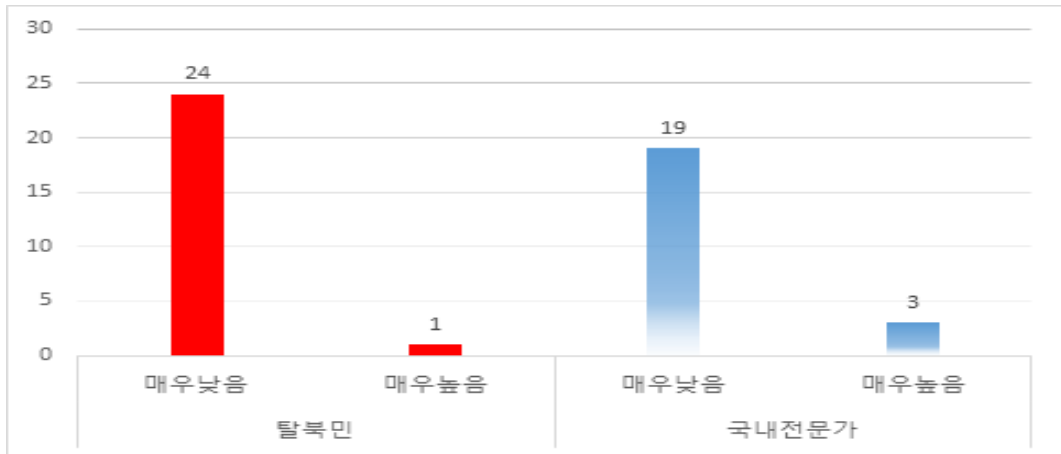


이처럼 탈북민과 국내전문가들 간의 시각차가 큰 이유는 북한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전문가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나, 탈북민들은 주기적으로 북한내부와 전화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증감추세에 관한 정보는 국내전문가 보다 정확할 것으로 예측된다.

언론·종교·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표III-3>의 도표에서 탈북민은 측정값이 평균 1.77점, 국내전문가는 평균 3.04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경험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다. 즉, 북한에서 직접 살았던 탈북민과 간접 정보를 접한 국내전문가와 의 인식격차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등간척도 5점을 체크한 응답자를 제외한 숫자를 비교해 보면, 탈북민과 국내전문가들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림 III-7〉 북한 내 언론·종교·출판의 자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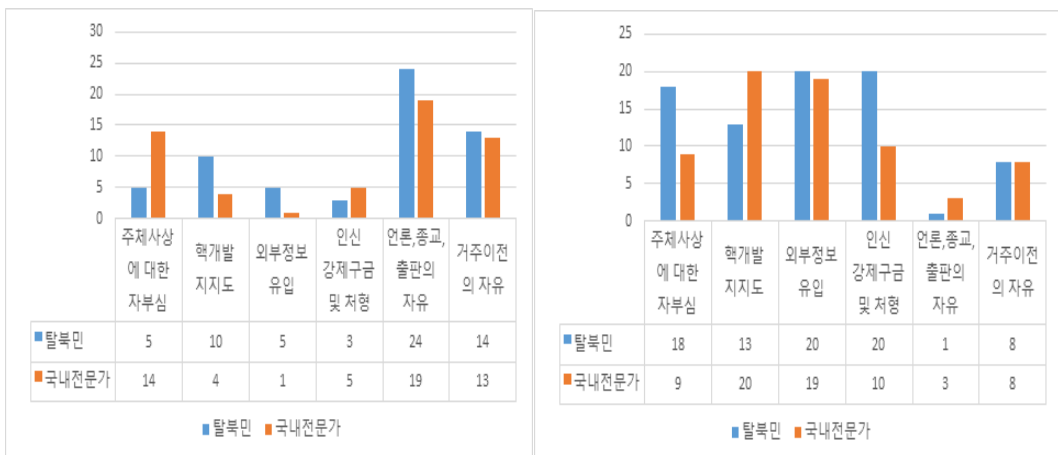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핵개발 지지도, 강제구금과 처형, 언론·종교·출판의 자유를 제외한, 외부정보 유입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탈북민과 국내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8〉 정치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단위: 명)

<매우감소: 5점이하>

<매우증가: 5점이상>



다시말해,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언론·종교·출판의 자유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36.3%, 국내전문가의 38%만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4절 사회분야

사회분야의 지표로는 삶의 만족도, 인구압력, 난민 등의 분류에 따라 4가지 세부항목을 측정하였다. 사회분야에서 탈북민과 국내전문가 간의 의미있는 편차가 나타난 항목으로 “북한 내 꽃제비 숫자,” “남한 입국 탈북민 증가”에 관한 항목이다.

〈표 III-4〉 사회분야 세부항목 측정 결과

항목	국내전문가	탈북민
Q21) 삶의 만족도	4.31	3.88
Q22) 주택보급 문제 개선	4.54	3.27
Q23) 꽃제비 증가	3.12	5.31
Q24) 탈북민 증가	3.54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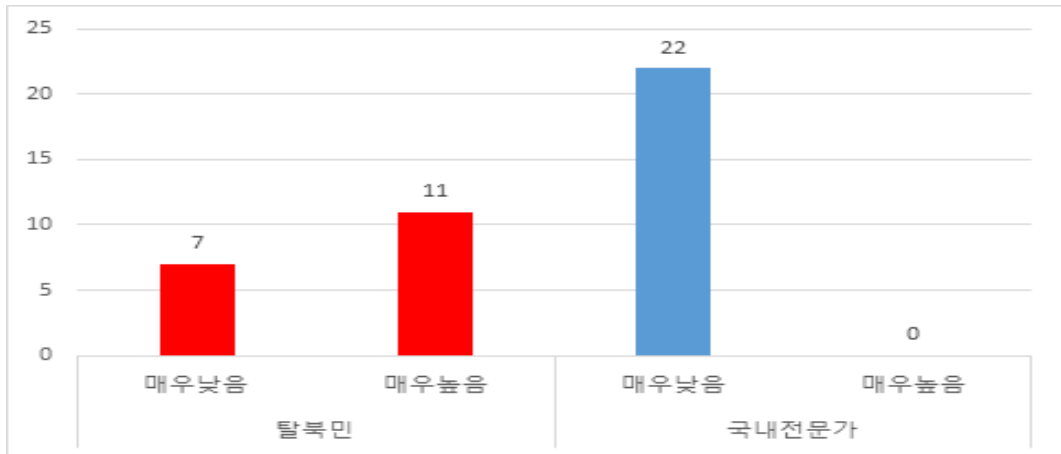
* 각 질문마다 응답자가 체크한 등간척도의 평균을 의미함

1990년 고난의 행군시기 집중적으로 양산된 꽃제비는 탈북민과 국내전문가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민의 61%가 아직도 꽃제비 숫자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내전문가는 거의 모두 꽃제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꽃제비와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연관돼 있다. 아무래도 국내전문가는 실생활과 관련된 북한내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다. 반면 탈북민은 가족·친지들이 북한내 거주하고 있고, 전화 및 인편을 통해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림 III-9〉 사회분야 북한 내 꽃제비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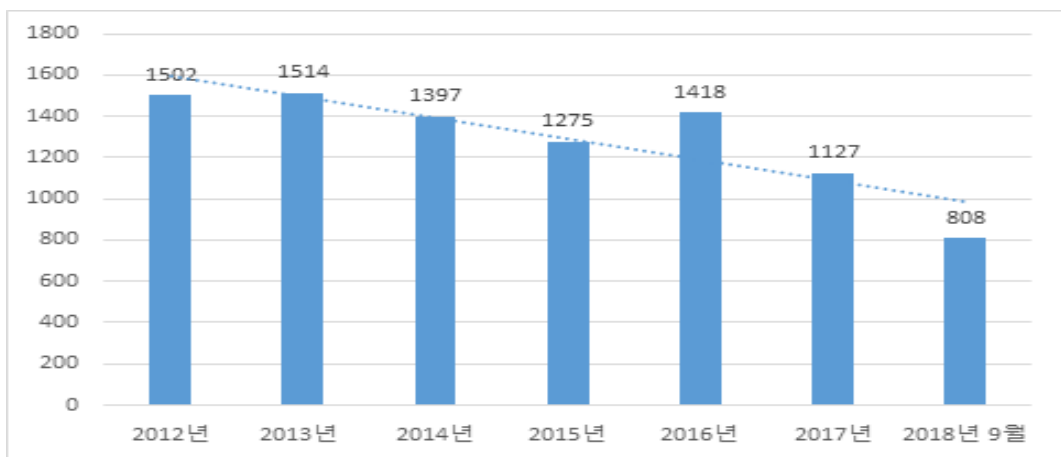
(단위: 명)



2018년 9월 현재 국내입국 탈북민은 32,147명이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탈북여성 비율은 2012년 73%, 2013년 46%, 2014년 78%, 2015년 80%, 2016년 79%, 2017년 83%, 2018년 86%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III-10〉 국내 탈북민 입국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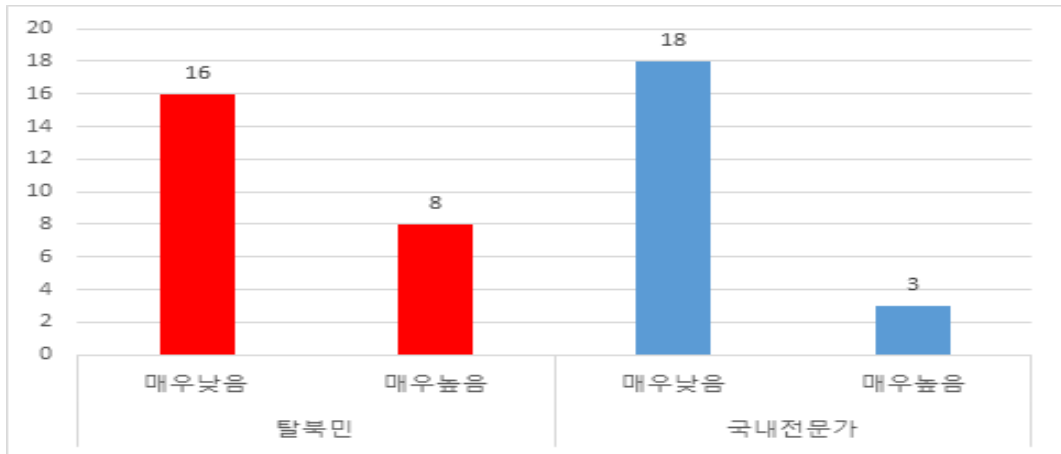


탈북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등장 이후 국경경비 강화, 북한 내 실물경제 호전,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의 관망 등의 요인에 따라 국내입국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향후 66.6%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국내전문가 역시 85.7%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향후 개선된다면, 국내입국 탈북민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Ⅲ-11> 사회분야 향후 남한 입국 탈북민 숫자

(단위: 명)



북한주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탈북민의 75%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내전문가 61.9%가 여기에 동의를 표하였다. 주택보급 문제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탈북민 85%가 불만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전문가 43.4%는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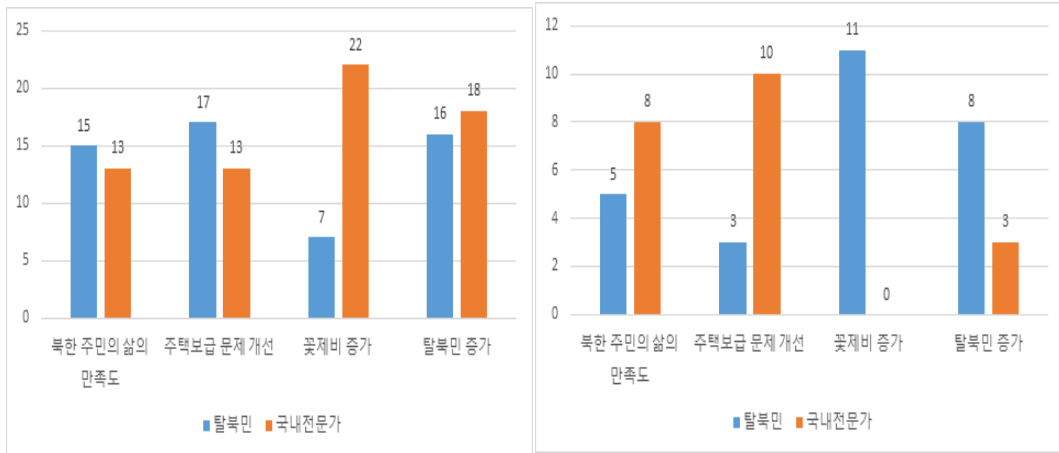
사회분야에서는 <Ⅲ-4>와 <그림Ⅲ-9>를 비교해 볼 때, 북한 내 꽃제비 숫자 증가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탈북민과 국내전문가간에 그리 큰 인식차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III-12〉 사회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단위: 명)

<매우감소: 5점이하>

<매우증가: 5점이상>



<그림 III-12>는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분야 측정항목별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여 나가려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정보가 개방되거나 또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제5절 국제분야

국제분야의 지표로는 외부간섭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대중국 경제의존도 등 2가지 세부항목을 측정하였다. 북한은 핵·미사일 발사실험과 6차례의 핵실험에 따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일부국가에서는 독자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동시적으로 받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92.7%에 달한다.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

〈표 III-5〉 국제분야 세부항목 측정 결과

항목	국내전문가	탈북민
Q25)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조치	7.15	7.81
Q26)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7.15	7.62

* 각 질문마다 응답자가 체크한 등간척도의 평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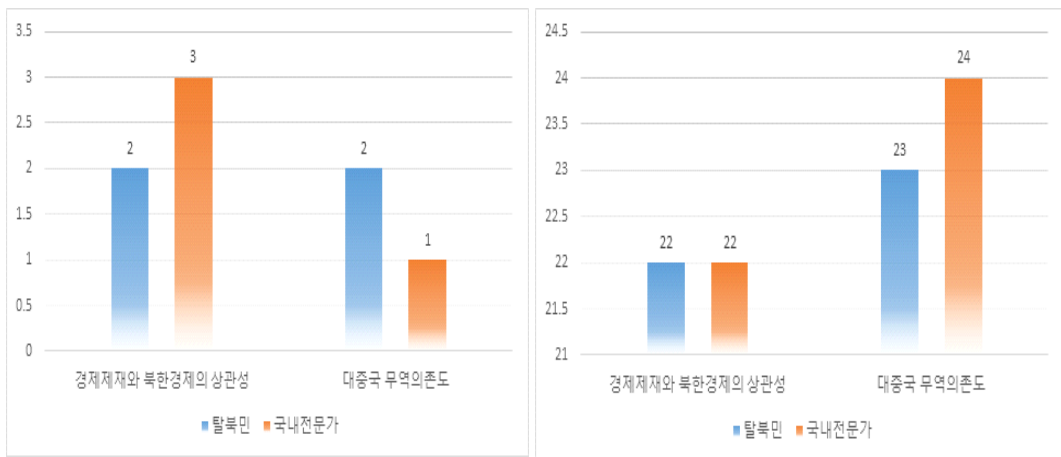
국제분야의 세부항목에서는 탈북민과 국내전문가 간에 인식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 조치가 북한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양 그룹은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III-13〉 국제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단위: 명)

<매우감소: 5점이하>

<매우증가: 5점이상>



〈그림 III-13〉의 결과로 볼 때, 탈북민과 국내전문가들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인식면에 큰 시각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제6절 미래분야

미래분야의 지표로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안정성과 “남북·북미 회담 이후 체제 내부 안정성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표 III-6〉 미래분야 세부항목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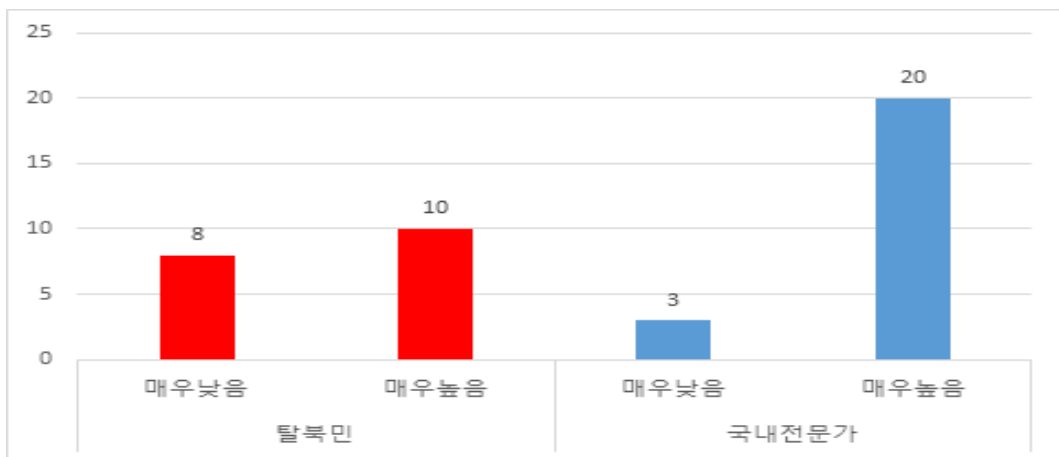
항목	국내전문가	탈북민
Q26) 김정은 체제 내부 안정성	6.88	4.38
Q27)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체제 내부 안정성	7.11	6.31

* 각 질문마다 응답자가 체크한 등간척도의 평균을 의미함

김정은 체제의 내부 안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에 대해 탈북민과 국내전문가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었다. 탈북민의 경우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약하다고 평가했으나, 국내전문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그림 III-14〉 미래분야 김정은 체제의 내부 안정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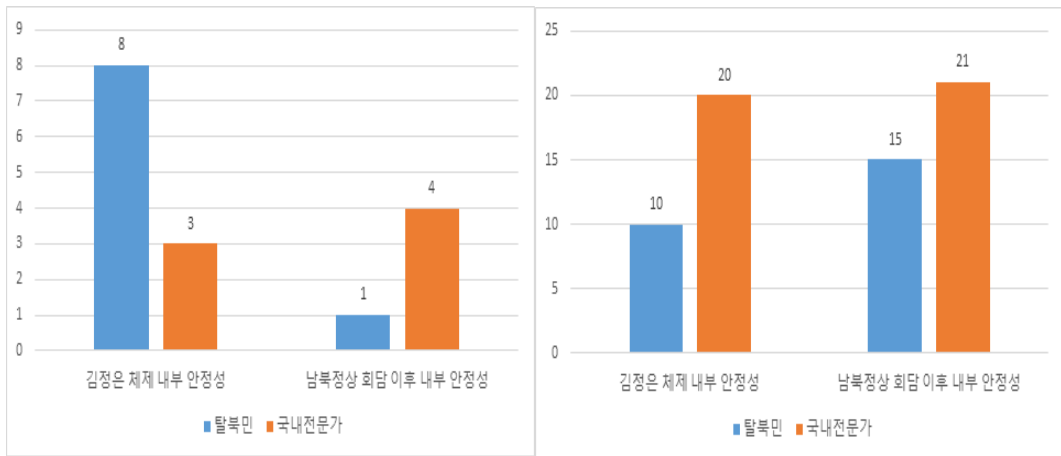
2012년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체제 내부안정성에 대하여 탈북민의 55.5%는 매우높다고 평가한 반면, 국내전문가의 86.9%는 체제 내부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림 Ⅲ-15〉 미래분야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인식비교

(단위: 명)

<매우감소: 5점이하>

<매우증가: 5점이상>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탈북민의 94.1%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고, 국내전문가의 경우 84%가 체제 안정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하튼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북한 체제 안전성 평가 및 전망

제1절 체제 안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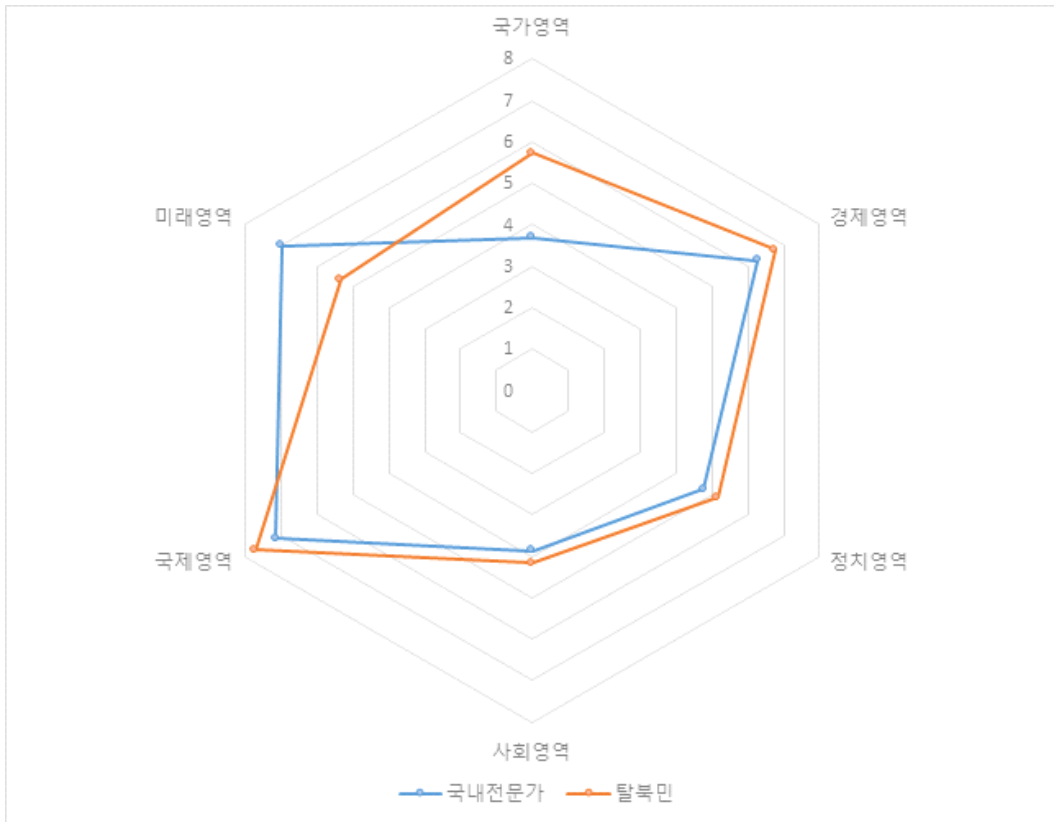
국내전문가와 탈북민의 지표별 차이는 <표IV-1>에서 보듯 국가부문에서 시각차가 가장 크게 발생했고, 미래분야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경제지표 분야에서는 유사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지표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수에서는 ‘권력투쟁 빈도’, ‘공안기구간 갈등과 충돌’, ‘벽보·낙서·삐라의 출현’, ‘시장강화와 국가충성도 약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핵개발 지지도’, ‘인신강제 구금 및 처형’, ‘장마당 꽃제비’, ‘김정은 체제 내부 안정성’ 등에서는 양 그룹간 상이한 시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Ⅳ-1〉 PSI 항목별 위기지수

지표	항목	국내전문가(평균)	탈북민(평균)
국가	Q1) 권력투쟁 빈도	3.68	5.73
	Q2) 공안기구간 갈등과 충돌		
	Q3) 향후 공안기구의 반정부 투쟁		
	Q4) 당·군·정 간부의 자긍심		
	Q5) 벽보·낙서·빠라의 출현		
	Q6) 주민들의 집단소요		
경제	Q7) 시장강화와 국가충성도 약화	6.27	6.77
	Q8) 경제호전		
	Q9) 식량문제 개선		
	Q10) 직업별 빈부격차		
	Q11) 교육비 비중		
	Q12) 김정은의 개혁개방 의지		
	Q13) 북한 노동자 해외진출		
	Q14) 지식인 선진지식 습득의지		
정치	Q15)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4.78	5.15
	Q16) 김정은의 핵개발 지지도		
	Q17)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Q18) 인신의 강제구금 및 처형		
	Q19) 언론·종교·출판의 자유		
	Q20)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사회	Q21)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3.87	4.17
	Q22) 주택보급 문제 개선		
	Q23) 꽃제비 증가		
	Q24) 탈북민 증가		
국제	Q25)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7.15	7.71
	Q26)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미래	Q27) 김정은 체제 내부 안정성	6.99	5.35
	Q28) 정상회담 이후 체제 안정성		

* 각 질문마다 응답자가 체크한 등간척도의 평균을 의미함



<표IV-1>을 방사형 차트로 표시할 경우,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연하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북한 내부정보의 획득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탈북민은 핸드폰과 인편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반면, 국내전문가들은 공식 매체나 연구자료를 통해서 북한내부 정보를 얻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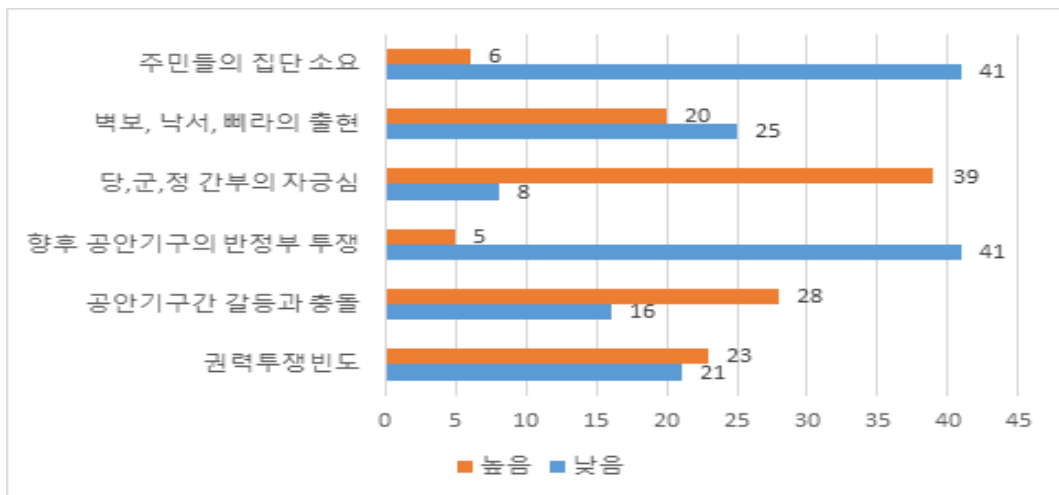
〈표Ⅳ-2〉 PSI 항목별 응답자 분포

지표	항목	탈북민(명)		국내전문가(명)		합계(명)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국가	Q1) 권력투쟁 빈도	2	19	19	4	21	23
	Q2) 공간기구간 갈등과 충돌	2	22	14	6	16	28
	Q3) 향후 공간기구의 반정부 투쟁	18	5	23	0	41	5
	Q4) 당·군·정 간부의 자긍심	6	16	2	23	8	39
	Q5) 벽보·낙서·빠라의 출현	8	15	17	5	25	20
	Q6) 주민들의 집단소요	17	6	24	0	41	6
경제	Q7) 시장강화와 국가총성도 약화	1	21	7	12	8	33
	Q8) 경제호전	7	14	9	12	16	26
	Q9) 식량문제 개선	9	14	6	15	15	29
	Q10) 직업별 빈부격차	2	24	0	26	2	50
	Q11) 교육비 비중	2	20	3	16	5	36
	Q12) 김정일의 개혁개방 의지	4	17	4	21	8	38
	Q13) 북한 노동자 해외진출	0	26	2	23	2	49
	Q14) 지식인 선진지식 습득의지	7	19	6	19	13	38
정치	Q15)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5	18	14	9	19	27
	Q16) 김정일의 핵개발 지지도	10	13	4	20	14	34
	Q17)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5	20	1	19	6	39
	Q18) 인신의 강제구금 및 처형	3	20	5	10	8	30
	Q19) 언론·종교·출판의 자유	24	1	19	3	43	4
	Q20)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14	8	13	8	27	16
사회	Q21)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15	5	13	8	28	13
	Q22) 주택보급 문제 개선	17	3	13	10	30	13
	Q23) 꽃제비 증가	7	11	22	0	29	11
	Q24) 탈북민 증가	16	8	18	3	34	11
국제	Q25)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2	22	3	22	5	44
	Q26)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2	23	1	24	3	47
미래	Q27) 김정은 체제 내부 안정성	8	10	3	20	11	30
	Q28) 정상회담 이후 체제 안정성	1	15	4	21	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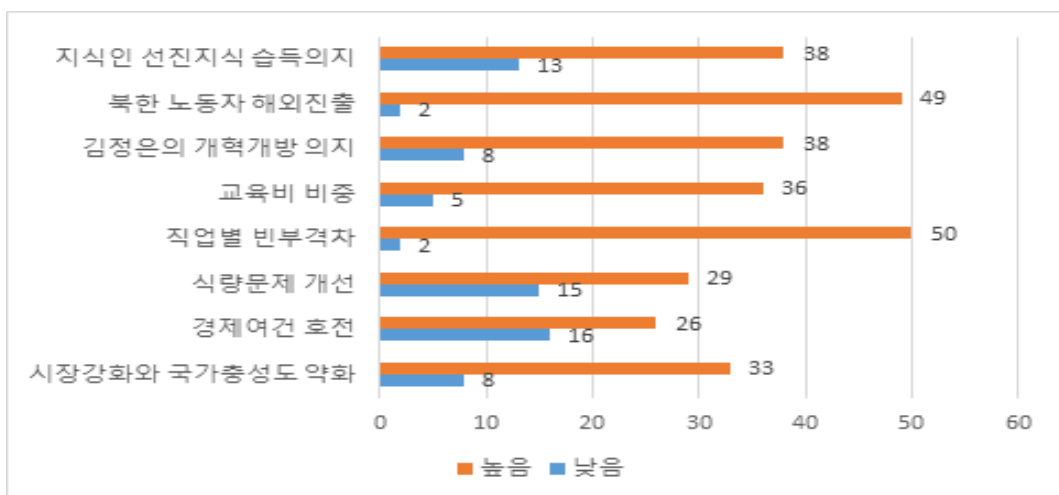
* 등간척도 5점(보통)을 기입한 숫자를 제외하고 증감추이로 재분류한 수치임.

국가영역 분야에서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87.2%(41명)는 김정은 집권후 주민들의 집단소요가 감소돼 왔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공안기구의 반정부 투쟁 역시, 83.6%(41명)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당·군·정 간부의 자금심은 82.9%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Ⅳ-1〉 국가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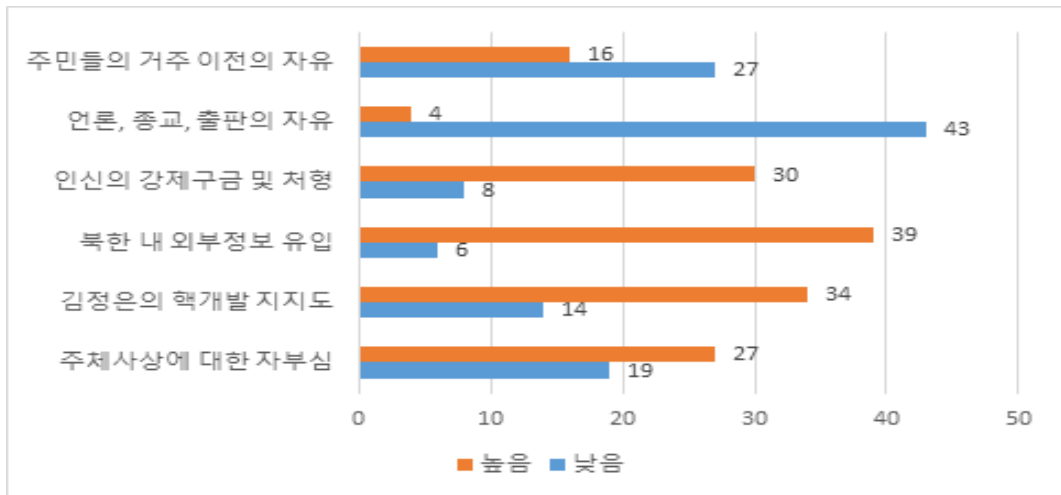


〈그림Ⅳ-2〉 경제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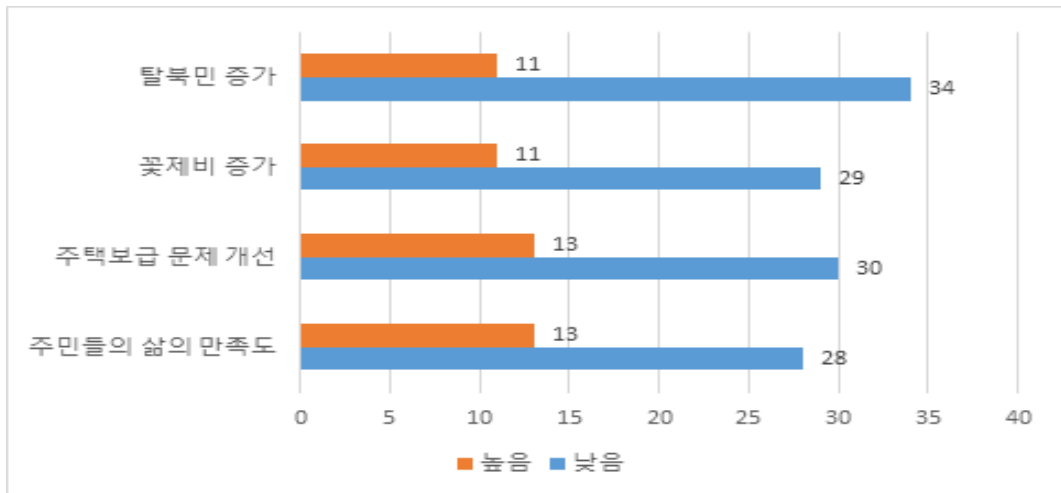
<그림Ⅳ-2>는 경제영역 분야에서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96%(49명)가 노동자의 해외파견 진출의지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직업에 따른 빈부 격차도 96%(50명)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입장은 61.9%에 달하고 있다. 시장(장마당)의 확대가 국가충성도를 약화시킬 것 인가에 대해서는 80.4%(33명)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북한 내 경제여건의 개선에 따라 87.8%(36명)가 교육비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정은의 개혁·개방의지와 관련하여 82.6%(38명)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식량문제도 67.4%(29명)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림Ⅳ-3> 정치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그림Ⅳ-3>은 정치영역 분야에서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91.4%(43명)가 북한 내에서 언론·종교·출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서는 62.7%(27명)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인신의 강제구금 및 처형은 78.9%가 북한 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에 대해서는 86.6%(39명)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정은의 핵개발 지지도에 관한 물음에서 70.8%(34명)가 지지도가 높을 것으로 응답한 반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58.6%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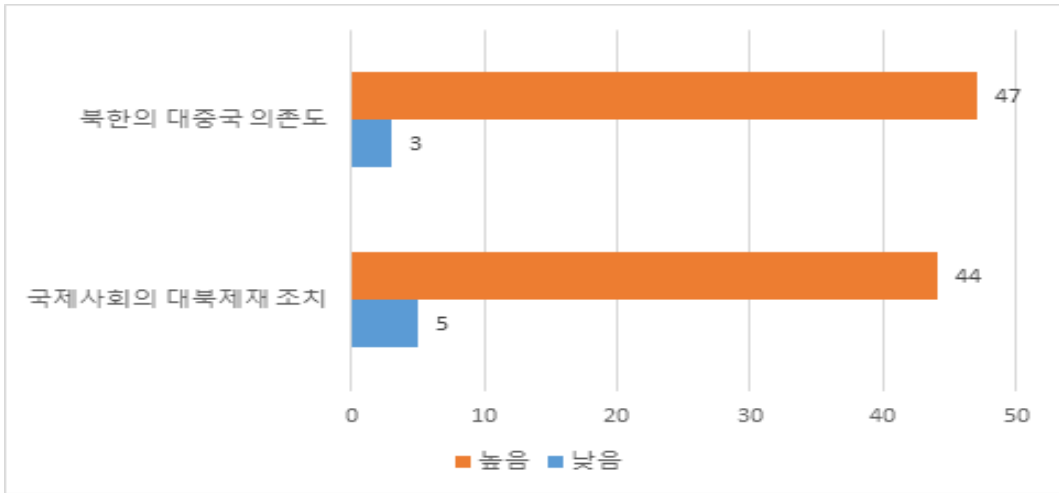
〈그림Ⅳ-4〉 사회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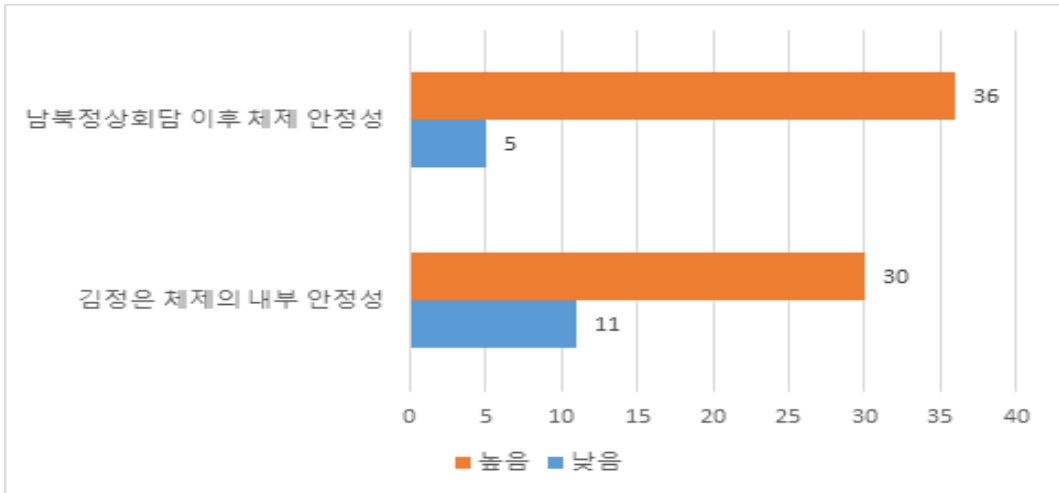
<그림Ⅳ-4>는 사회영역 분야에서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68.2%(28명)가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주택보급 문제도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69.7%(30명)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90~2000년대 북한 내 사회문제가 된 꽃제비의 경우, 72.5%(29명)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았으며, 탈북민 국내입국과 관련하여 75.5%(34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림Ⅳ-5>는 국제영역 분야에서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94%(47명)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였고,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조치가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89.8%(44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국제지표에서는 국내전문가 그룹과 탈북민 그룹간에 이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Ⅳ-5〉 국제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그림Ⅳ-6〉 미래지표 항목별 응답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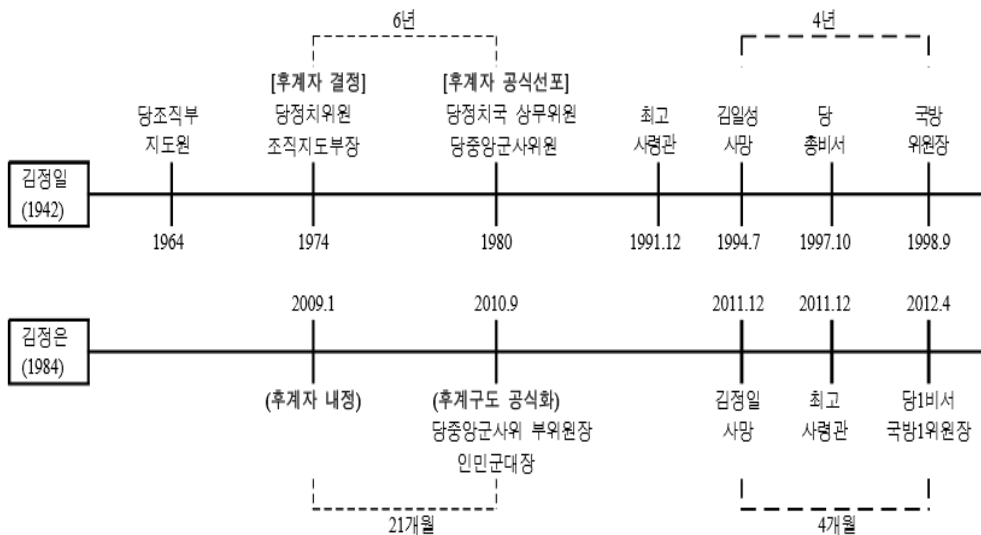
〈그림Ⅳ-6〉은 미래영역 분야에서 국내전문가와 탈북민의 73.1%(30명)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체제 안정성은 87.8%(36명) 상승하였다.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체제 안정성이 높아진 이유와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제2절 체제 안정성 전망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북한체제’(North Korean Regime)란 용어 속에는 국가, 제도, 정권을 포함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정권이란 국가권력을 장악한 지도자와 그 집단을 지칭하며, 제도란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경제 제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국가란 정권과 제도에 국가의 여러 기관과 국민 영토가 합쳐진 개념이다.²⁷⁾

북한체제는 국가부분에서 공안기구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거나, 시장이 확대되어 국가경제를 통제할 수단을 상실할 때,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한 공지와 김정은의 대내외 정책의 지지도가 하락하게 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손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IV-7>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 구도 비교



출처: 김갑식,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분석,” 『통일정책연구』 21권 1호(2012.6)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구(보위사령부, 국가안

27)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통일연구원, 2007), p.5.

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당조직, 군부의 통제 등을 기반으로 국가를 유지해 가고 있다. 국제사회가 완벽에 가까운 북한의 경제봉쇄를 단행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근근이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의 <그림Ⅳ-7>에서 보듯, 김정일은 1980년대부터 김일성과 공동정권을 운영한바 있고, 김일성 사후 21개월 동안 후계 정비작업을 거쳤다. 반면, 김정은은 김일성 사후 4개월 만에 공식후계자로 등극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모부 장석택을 처형하고, 단기간에 김정일의 고명 대신들을 숙청하였다. 이른바 세대교체를 통해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세력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체제 내부 위기는 잠재돼 있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김정은은 체제내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체제외부에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해 왔다. 이른바 미사일과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김일성이 1960년대 추진한 경제·국방병진 노선의 제2탄인 핵·경제병진 노선으로 귀착되고 있다.

<표Ⅳ-3>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내용

결의안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시기	2016.3.2	2016.11.30	2017.6.2	2017.8.5	2017.9.11
원인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미사일 실험	미사일 실험	6차 핵실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수출금지 •항공유공급금지 •위성발사금지 •소형무기수입금지 •외교관 추방 •화물검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수출상한선 •조형물, 은구리, 아연, 니켈 수출금지 •북한 내 금융기관 사무소 개설금지 •과학기술협력금지 •북한공관 규모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은행 등 기관 4속,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개인 14명 제재 목록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산 석탄, 철, 철광산 수출금지 •북한산 수산물 수출금지 •제재금지활동 연관 선박입항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유 연400만 배럴 동결 •정유제품 공급 55%감축 •섬유제품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사전 인가 •금지품목 적재 의심선박 공해상 검색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는 김정은에게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5월에는 우리 국민 77.2%가 투표에 참여해 41.1%의 지지로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써 대북정책 기조 변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공동번영의 기치아래 3대 목표(북핵문제 해결·남북 관계발전·신경제공동체구현), 4대전략(단계적·북핵문제진전·제도화·통일기반조성), 5대원칙(우리주도·강한안보·상호존중·국민소통·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발표하고, 남북한 정상간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였다.²⁸⁾ 아울러 대북정책 4No 선언'(대북 적대시 정책, 대북공격, 정권붕괴, 인위적 통일)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책변화를 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²⁹⁾

다시말해 국내 정치·체제의 불안정을 강력한 외부 적에게 그 원인을 전가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경제희생을 통한 민심을 회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도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강고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8)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회담과 5·26 판문각 회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평양남북정상회담(9.18 ~ 20)을 개최하고 6개항의 합의(①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②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③인도적 협력강화, ④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⑤핵무기 없는 한반도, ⑥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를 도출하였다.

29) 미국 또한 한국처럼 대북정책의 4대 기조로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정권교체 불추진, △대북제재와 압박지속,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을 제안하였다.

<표Ⅳ-4> 한반도 평화의 3대 목표와 3단계 추진방안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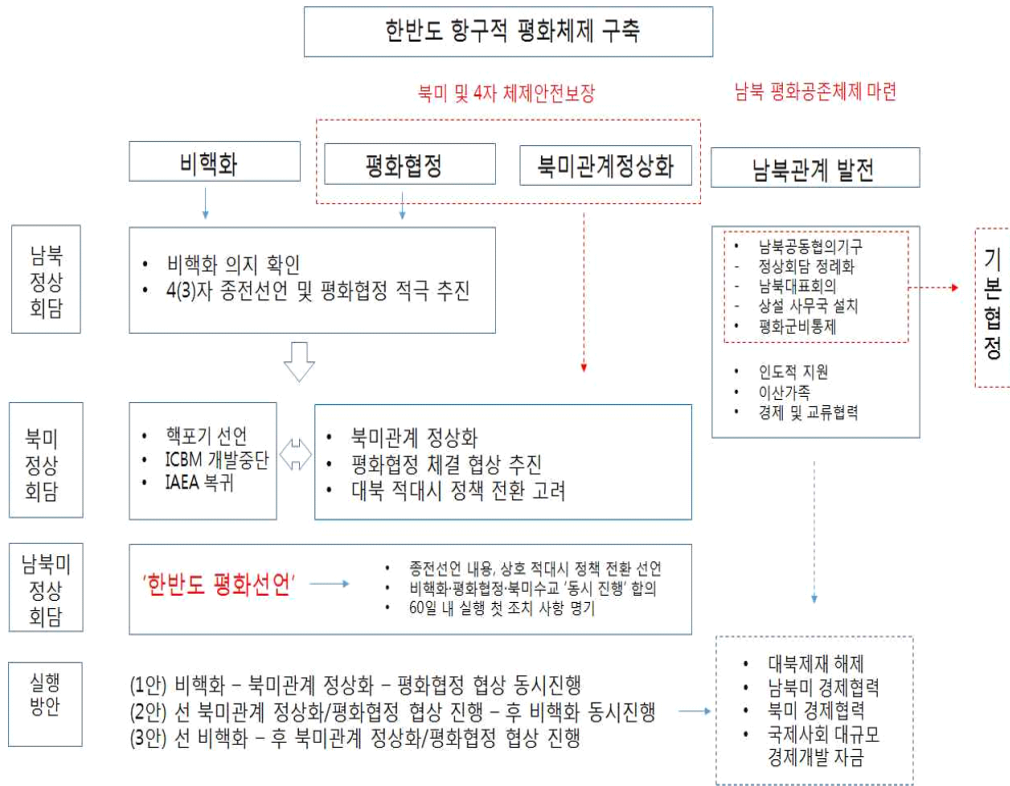
3대 평화	주요공약	3단계 평화
안보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대응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 •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략 발휘의 극대화, 미래 전을 수행할 군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정비) 	<p>소극적 평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 기초위에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 북핵문제 해결과 전쟁없는 한반도 	
시장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 (생산과 소비, 무역에서 남북공동체 형성) • 남북 접경지역의 발전 •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p>적극적 평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의 개선 및 이산가족,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본협정의 체결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민주평화		<p>항구적 평화</p>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3대 목표와 3단계 추진방안에 따라 2017년 7월 6일 이를 구체화시킨 5대 원칙 4대 제안을 포함한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신베를린 선언에 대해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요구조건’을 발표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1)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 (2) 남한에 끌어들인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3) 남한 핵 무기와 기지들의 철폐 및 검증, (4) 미국이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말 것을 담보, (5)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위협·공갈하거나 북한을 반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요구하였다.³¹⁾

30) 더불어 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4대 비전 12대 약속」(더불어민주당, 2017), pp.226-228.

31) “남조선당국의 <북비핵화> 꾀변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07.06.

<그림 IV-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³²⁾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내 급변사태가 없는 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 역시 북한이 향후 적극적이든 아니면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문체부가 실시한 대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이란 응답자가 85.1%로 나타난 반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43.2%에 불과했다.³³⁾

32) 홍민,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협상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2018,04), p.9.

33) 문체부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2018년 6월 29일(금)부터 7월 6일(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제3절 소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우리는 '90년대 구소련을 위시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 왔던 길을 알고 있다. 급격한 체제변화를 경험한 국가도 있고, 완만한 경로로 체제변혁을 이룬 국가도 있다.

〈표Ⅳ-5〉 사회주의체제 변화 유형별 특징³⁴⁾

유형	속도	상층부	시민사회
소련형	급격한 개혁·개방	지배 엘리트 분열	약
중국형	완만한 개혁·개방	지배 엘리트 합의	약
중부유럽형	급격한 개혁·개방	대안 정치 세력	중
동유럽형	완만한 개혁·개방	지배 엘리트 재집권	강

시민사회가 일찍부터 형성된 중·동부 유럽은 시민사회의 결집정도와 지배엘리트의 세력관계에 따라 급격하거나 또는 완만한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 왔다. 중국과 베트남은 형식상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기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자본주의와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친화적이다. 만약 북한이 체제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이전 사회주의체제가 경험한 변화의 유형과 흡사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Ⅳ-4>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쿠바식 모델도 북한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쿠바는 전형적 농업국가이고, 북한은 산업화된 국가이므로 쿠바식 모형을 따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4) 김동엽,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과 체제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p.22.

〈표Ⅳ-6〉 사회주의체제 변화 국가별 사례³⁵⁾

유형(사례)	체제 변화 방식
러시아형 (러시아)	지배 엘리트의 분열(개혁파와 보수파)과 대립 → (소련해체) → 급진 파 엘리트와 금융 과두제 연합형성(‘보수파’ 몰락)
동유럽형 (루마니아)	지배 엘리트의 잠재적 분열(개혁파 엘리트 미형성) → (국지적 대중 봉기, 권력 투쟁 내연) → 지배 엘리트의 인적 연속성 유지(특정 분파제거)
중부유럽형 (폴란드, 헝가리)	지배 엘리트 개혁파와 반체제 엘리트의 정치적 타협(보수파 고립) → 정치 엘리트의 일부 교체, 경제 엘리트(기술관료, 경영 엘리트)의 인적 연속성 유지
중국형 (중국,베트남)	지배 엘리트(개혁파와 보수파) 내부의 정치적 타협 → 점진적 경제 개혁 추진(정치적 강경 노선 유지) → 지배 엘리트의 내적 통합과 정치체제 지속성 유지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예상 가능한 변화 시나리오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 변화 여부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암살 또는 쿠데타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면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김일성 이후 북한은 무균질의 정치·사회 체제를 성립시켰고, 당분간 통치 권력에 저항하거나 대항할 조직적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내변수는 <표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경제’, ‘정치’, ‘사회’, ‘국체’, ‘미래’ 분야에 대한 안정성 여부라고 판단할 경우, 대외변수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개선(북미간 대결 구도) 향방에 달려 있다. 따라서 대내 변수와 대외 변수를 고려하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35) 김동엽, 앞의 글, p.19.

〈표Ⅳ-7〉 김정은 체제 안정성 시나리오

		내부변수(대내요인)	
		안정	불안정
대외변수 (대외요인)	북미 협력	A形	B形
	북미 갈등	C形	D形

1. 안정적 개혁·개방: A形

안정적 개혁·개방형은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안정되고, 제2차 북미정상 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이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로 진행될 경우, 북미·북일 수교가 이뤄질 것이고, 북한은 안정적으로 대외경제 협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북일수교 과정에서 100-2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일청구자금은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가 동시·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하여 본격적인 대북지원의 길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 우리식 사회주의: B形

우리식 사회주의 형은 북미와 남북 관계는 협력적이나, 북핵폐기 과정에서 군부의 집단반발 또는 엘리트 간의 이해충돌, 그리고 인민들의 비조직적 소요 사태 등이 발행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김정은은 급격한 정책노선 변경보다는 당·군·정 엘리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동시에 한·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유인하는 동시에 엘리트에게 물질적 보상을 배분함으로써, 충성을 보장받는 이른바 선택적 포섭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체제단속 차원에서 탈북자와 외부정보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핵·경제 병진노선: C形

핵·경제 병진노선형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무기로 경제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사적 시위를 강행하는 이른바 봉쇄정책을 펼치는 경우이다.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을 통해 대북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각종 장거리 ICBM 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자력갱생의 구호에 따라 인민들을 각종 경제건설에 동원할 것이다. 남북경협 및 한국의 대북지원은 답보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남방 3각 동맹 vs. 북방 3각 동맹구도가 불활하는 이른바 신냉전체제로 진입할 개연성이 있다.

4. 공포정치: D形

공포정치형은 김정이 체제가 내부적으로 불안정하고, 북미가 갈등관계를 지속할 경우 미국은 북한체제의 붕괴상황을 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미는 북한 내부상황 파악에 몰입하게 되고, 한미연합사령부는 군사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군의 우발적 도발행위를 강력 경고하고, 체제 붕괴에 따른 핵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대북 친선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북중국경지대의 경계를 강화하고 난민유입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정은은 대외적 위기보다 내부적 위기 타파를 위해 숙청과 처형을 통한 공포정치를 극단적으로 추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 결 론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이 69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전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체제가 시작되었다. 김정은은 장례 직후인 12월 30일 최고사령관직에 올랐다. 이어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와 4월 13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확보했다. 이로써 김정은은 북한의 당·군·정 3대 권력기구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여 사실상 권력승계를 완료했다.³⁶⁾

김일성, 김정일 사후 한국사회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란 주장이 풍미하였다. 북한군부와 인민들이 후계자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세습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흡수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고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통일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체제 선택의 정치는 북한인민들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정책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사회 내 정권교체 과정에서 북한내부 정세에 대한 판단은 정권 입맛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개발 정책도 포기하지 않았다. 신세대 지도자 김정은의 등장은 개혁·개방을 급속하게 이뤄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마저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후 지난 25년간 북한체제는 붕괴하지 않았고,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노선을 밟지 않았음에도 독재세습 정권은 꾀꾀하게 살아남았다. 역사적 사례를 고찰할 때, 독재정권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 형태에 따라 독재정권의 안정성도 달라져 왔음을 목도할 수 있다.

36) 김동엽,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과 체제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p.9.

지구상의 여타 독재정권과 차별화된 북한정권의 특수성은 일당독재를 바탕으로 엘리트와 주민들을 선별적으로 포섭하여 체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층성 엘리트에게 보상을 제공할 잉여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 체제가 통치엘리트에게 충성심을 담보할 보상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스볼릭(Milan W. Svoblik)은 독재체제는 제도, 지도자, 정치적 산출 등에서 민주주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³⁷⁾ 또한, 독재정권은 의회, 정당, 선거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독재자는 신분(왕, 군인, 민간인)도, 통치기간도 다양하다. 1946~2008년 사이에 하루 이상 집권한 316명의 독재자는 자연사, 선거, 지배집단의 투표, 혈통승계 등 비헌법적 방식으로 권력을 잃었다. 실제로 다수의 독재자는 민중봉기보다 독재자의 이니셔티브, 정부, 억압기구 등 정권 내부자의 쿠데타에 의해 제거되었다.

김정은 독재체제의 안정성은 국내전문가와 탈북민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국가부문에서 공안기구 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거나, 시장이 확대되어 국가경제를 통제할 수단을 상실할 때,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한 금지와 김정은의 대내외 정책의 지지도가 하락하게 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은은 체제내부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체제외부에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성공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우호적인 대외환경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다. 즉, 2017년 출범한 한미 양국은 북한을 향해,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공언하였다. 김정은으로서서는 경제회생을 통한 민심을 회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 방향이 조정되거나 또는 핵폐기에 따른 군부의 반발이 초래될 경우, 북한체제는 극단의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우리에게도 그리 이로운 것이 아니다. 극단의 선택

37) Svoblik, Milan W.,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에 내몰릴 때,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남한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내부 정세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권오국,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그 가능성과 장애요인,”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한국동북아학회, 2018).

권오국, “평화체제와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한반도 대전환기의 현황과 전망」(한국북방학회, 2018).

김동엽,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과 체제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민족통일연구원, 1996).

더불어 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4대 비전 12대 약속」(더불어민주당, 2017).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통일연구원, 2007)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통일연구원, 2006)

정성윤 외,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 비교권위주의적 시각”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통일연구원, 2017)

2. 해외문헌

Andrew Heywood, Political Theory: An Introduction(New York: MacMillan, 1999).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 Perspectives on Politics , Vol. 12, No. 2 (2014).
-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rocracy(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5).
- Charies. Wolf Jr. Kamil Akramov. North Korea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Rand, 2005).
-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 (July, 2007).
- Kernell, Samuel, Gary C. Jacobson, Thad Kousser, and Lynn Vavreck. The Logic of American Politics(Washington D.c, CQ Press,2015).
-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6, No.4(July/august 2016).
- Navarro, Peter.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ength,” The National Interest(2016.3.31).
- Rober D. Kaplan, “When North Korea Falls,” Atlantic Monthly(October 2006).
- Rod Hague and Martin Harro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8th ed.(New York: Palgrave MacMilan, 2010).
- Svolik, Milan W.,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New York: Charles Scribener’s Sons, 1989).

3. 기타

NewDaily, “‘폭군’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340명 총살·숙청”, 2016.12.31.

자유일보, “김정은 집권초기 3000명 처형, 15,000명 수용소 수감”,
2018.10.29.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당국의 《북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뿐이다,”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
2016.07.06.

중앙일보, “독재국 권력세습 성공률 39%…3년차 김정은 시험대,” 2013.12.17.

채널A, “北 종교 활동자 119명 처형…바티칸 ‘신중히 검토’, 2018.10.22.

<http://www.transparency.org>(접속일자: 2018년 7월 20일).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18/DemocracyIndex>(접속일자: 2018
년 7월 22일).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부터, 2018년 9월까지를 분석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질문항목마다 2012년 5점(보통)을 기준으로, 현재와 대비하여 감소추세는 ‘매우 낮음’ 쪽으로 체크해 주시고, 증가추세일 경우 ‘매우 높음’ 쪽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께서는 김정은 정권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 빈도(횟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 귀하께서는 북한 내 공안기구(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간의 업무영역 및 권한에 대한 갈등과 충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3】 귀하께서는 **향후(2018~2021년)** 북한 내 공안기구(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의 반란·항명·폭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4】 귀하께서는 당·군·정 간부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긍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5】 귀하께서는 당 정책이나 최고지도자를 비방하는 유언비어나 벽보·낙서·빠라의 출현 경향에 대하여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6】 귀하께서는 북한 주민들의 집단항의·소요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7】 귀하께서는 장마당(시장)의 활성화가 주민들의 국가충성도를 약화시킨다고 평가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8】 귀하께서는 북한주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 여건은 지속적으로 좋아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9】 귀하께서는 북한주민들이 평가하기에 식량 문제가 개선돼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0】 귀하께서는 북한주민의 직업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하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1】 귀하께서는 북한주민의 가계수입 중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 증가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2】 귀하께서는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방정책 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3】 귀하께서는 북한 주민들이 해외파견 노동자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4】 귀하께서는 북한 내 지식인(엘리트)들의 해외 진출 또는 선진지식 습득 의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5】 귀하께서는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6】 귀하께서는 북한주민들이 생각하는 김정은의 핵개발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7】 귀하께서는 북한주민들이 남한 또는 다른 국가의 방송이나 외부정보를 접할 기회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8】 귀하께서는 북한당국에 의한 강제구금 또는 처형 등의 빈도(횟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19】 귀하께서는 북한당국의 언론·종교·출판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향이 높아져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0】 귀하께서는 북한당국에 의한 일반주민의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가 증가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1】 귀하께서는 북한주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2】 귀하께서는 북한당국에 의한 일반주민들의 주택보급 문제가 점차 개선돼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3】 귀하께서는 북한 내 꽃제비 숫자가 증가해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4】 귀하께서는 **향후(2018~2021년)** 남한 입국 탈북민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5】 귀하께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 조치가 북한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6】 귀하께서는 **향후(2018~2021년)** 대북경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7】 귀하께서는 그동안 김정은 체제의 내부 안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문28】 귀하께서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체제 내부 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매우낮음 <————— 보통 —————> 매우높음										
0	1	2	3	4	5	6	7	8	9	10

책임과제연구보고서 2018-05

북한 체제 안정성 평가와 전망

발행 : 2019년 5월

인쇄 : 2019년 5월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